

|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 |

여성, 화해와 평화의 물길

2015년 9월 2일(수) 14:30~18: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

주최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Unification Preparation



국회여성가족위원회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 화해와 평화의 물길」을 주제로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통일은 여성을 비롯한 남북한 주민들 삶의 여건을 바꾸고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그간 여성들은 환경, 사회·문화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화해협력의 역량과 경험들을 축적해왔습니다. 평화통일 운동의 주체로서 여성의 참여확대는 성인지적인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대, 상호교류 활성화,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새로운 통일 시대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계 대표분들을 모시고 통일미래 한국을 준비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정 종 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 원 장 **유 승 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이 명 선**

프로그램

여성, 화해와 평화의 물길



		사회 : 전우택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	
14:30~15:00	개 회 식	인 사 말 정종욱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유승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축 사 나경원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15:00~15:20	발 표	여성과 평화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김은주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토론 사회 : 김성재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	
15:20~16:40	지정 토론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안김정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이난숙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장)	이민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장)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6:40~16:50	휴 식		
16:50~18:00	종합 토론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태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부의장)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이사) 서정숙 (한국여약사회 회장) 안정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원영신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 이영해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임정희 (시민일보 대표)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현주 ((사)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채경희 (삼정학교(탈북자녀) 교장) 최영애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대표) 함영이 (여의도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홍성순 (통일교육협의회 공동의장) 홍희경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황유정 (미중물여성연대 사무국장)

* 토론자 가나다순

목 차

여성, 화해와 평화의 물길



개회식

인사말 / 정종욱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3
인사말 / 유승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5
인사말 /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7
축 사 / 나경원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9
축 사 / 홍용표 (통일부 장관)	11
축 사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13

발표

여성과 평화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5
김은주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지정토론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47
김영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원장)	53
안김정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57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61
이난숙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장)	65
이민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67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장)	69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75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79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83

종합토론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태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부의장)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이사)
서정숙 (한국여약사회 회장)
안정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원영신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
이영해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임정희 (시민일보 대표)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현주 ((사)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원)
채경희 (삼정학교(탈북자녀) 교장)
최영애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대표)
함영이 (여의도연구원 객원연구원)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홍성순 (통일교육협의회 공동의장)
홍희경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황유정 (마중물여성연대 사무국장)

개회식

● 인사말 / 정종욱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유승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축 사 / 나경원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 정종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곳 국회에서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유승희 국회여성가족위원장님,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오늘 통일준비위원회가 준비한 국민공감대 세미나를 격려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나경원 국회외교통일위원장님, 홍용표 통일부 장관님,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통일준비위원회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위한 평화통일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가는 작업에 매진해왔습니다.

어떤 분야이든 통일 준비 작업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즉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고 통일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국제 사회에 가져올 다양한 편익들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 통일준비위원회는 출범 2년차를 맞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 하며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통일준비는 단순히 비단 정치, 외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등의 많은 영역에 있어 남북한 주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해의 역량과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여성과 무관한 일이 아니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껏 남북 여성교류는 민간교류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과 학술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직면한 생활 속의 새로운 의제, 그리고 남북한 여성들이 국제사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여 남북한 간의 교류를 견인하고, 실질적인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소통과 포용, 배움과 나눔의 덕목과 평화지향성은 오히려 평화통일의 공감대 형성에 있어 가장 큰 자산입니다.

특히 남북한 여성교류의 시작은 남북한 여성들이 평화와 화해에 대해 소통하고 궁극적으로 민족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해소 과정과 사회통합의 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폭을 넓히고 여성의 역할이 제고되어야만이 보다 평화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정착할 수 있었다는 해외의 여러 사례들이 말해주듯, 이제는 한국의 여성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통일준비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평화통일 준비과정에 대한 참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통일이 가져올 미래한국의 주역인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이 통일준비가 단순히 공허한 수사가 아니라 미래 한국의 모습을 그려내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조만간 시작될 남북한 간의 민간교류 과정뿐만 아니라, 저희 통일준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평화통일기반구축 작업에 여성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동안 통일과 화해, 그리고 평화를 위해 여성들이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과 실천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계각층의 여성분들을 대표해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정 종 욱**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여성, 화해와 평화의 물길’ 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함께 준비해주신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과 관계자 여러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님과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과 사회자, 토론자, 참석자 여러분, 모두 환영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입니다. 2차 대전 이후, 70년 전 냉전체제 희생물로 만들어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가 바로 이 땅에 있습니다. 1953년 정전 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후 아직도 전쟁상태가 종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세계평화를 위해 전쟁 상황과 분단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평화는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이해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국 속담에 “나쁜 평화가 뜻 있는 전쟁보다 항상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넘어서서 전세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미래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합니다. 남-북한 대화를 해 나간다면, 그것은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고, 한반도 주변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개성공단을 활성화 하고 끊어진 남북 경제협력의 고리를 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평화에 대한 서로의 신뢰가 경제를 살립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통일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효과는 1경4천451조원으로, 예상 통일 비용(4천657조원)의 3.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힘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 연대의 힘으로 만드는 세계 평화! 저 역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여성단체, 지자체, 여성정책 연구기관 등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유 승 희**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와 국회여성가족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미나 개최에 힘써주신 존경하는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님, 유승희 국회여성가족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본 세미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함께 해주신 나경원 국회의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홍용표 통일부 장관님,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통일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통일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남북한 사람들의 생활, 문화, 환경의 차이에 대한 수용과 포용이 있는 미래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일한국은 지금보다 더 복잡한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더 많은 준비와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여성과 여성계의 통일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양성 평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사회통합의 주역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역할은 평화통일 기반 구성에 생활과 환경, 문화의 3대 소통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성은 돌봄과 환경보호의 실천, 남·북한 주민간의 만남을 촉진하고 교류를 활성화 시켜 비군사적이고 비정치적인 생활담론과 실천담론을 이끌어가는 한반도 신뢰구축의 핵심 역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통일을 위한 역량과 경험은 이미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통일 노정에 여성들의 역할이 활성화 되고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소리가 들려야하고 모든

통일정책 담론과 논의 과정에 실질적인 여성의 참여와 동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역량이 통일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발휘될 때 좋은 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에서 ‘여성, 화해와 평화의 물길’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과 제안, 그리고 토론이 이후 통일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중요한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일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과 연결되는 만큼 여성이 이끌어가고 주체가 되는 통일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통일한국의 여성 의제들을 모색하고 성 인지적 통일을 향한 다양한 포럼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주신 소중한 실천 방안을 담아 통일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세미나의 사회를 맡아주신 전우택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님과 발표를 맡아주신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님, 토론의 사회를 진행해 주실 김성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이 명 선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나경원 의원입니다.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 <여성, 화해와 평화의 물길>이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님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유승희 위원장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와 통일,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해 고견을 나눠주실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분단 70년의 단절과 대립을 넘어 한반도 통일시대로 가는 중요한 해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 대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7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체들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 구체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특히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난(國難)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광복 7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 동시 달성이라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내는 데에는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성의 세심함과 돌봄의 리더십을 심분 발휘해 경색되어 있는 남북한의 이질성과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가 광복 70년을 통일준비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여성의 역할은 물론 통일사회의 기반이 되는 여성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 제시되는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통일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입니다. 국론이 통합되지 못한 통일담론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국민들의 통일을 향한 염원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통일사회 기반 여성정책의 큰 틀이 마련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 <여성, 화해와 평화의 물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나 경 원

축 사

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입니다.

광복70년을 맞아 마련된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통일준비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주관 하에 마련된 오늘 세미나는 통일의 올바른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통일의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즉,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에는 여성 인재들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여성, 화해와 평화의 물길’을 주제로 진행되는 평화통일 국민공감 세미나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큼니다. 오늘 세미나가 지난 70년의 위대한 여정 속에서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을 반추하고, 통일국가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는 통일시대의 문을 열어나가는 데에 보다 큰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응원을 당부 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통일부 장관 **홍 용 표**

축 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입니다.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통일준비위원회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으로 “여성, 화해와 평화의 물길”이라는 주제로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통일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통일을 향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뜻 깊은 세미나를 준비하신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님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유승희 위원장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광복 70년을 맞은 뜻 깊은 해이지만, 남북이 하나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냥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막상 통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 한국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미리 온 통일’이라 일컬어지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70%를 차지하는 여성이 취업, 자녀양육 문제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은, 통일 한국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말해 줍니다.

독일 통일의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집단은 통일 과정에 발언권이 없었던 ‘여성’이었으며, 특히 동독지역 여성이 실업문제, 사회보장 문제 등으로 큰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일 준비 과정에서부터 양성모두의 시각이 필요하며, 통일사회의 기반이 되는 ‘여성’과 ‘가족’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 통합의 핵심기반인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건강한 통일을 이루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한의 여성·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은 남북한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임과 동시에 남북한 교류를 촉진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동안 남북교류 협력에 앞장서 왔고,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여성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국민공감대 세미나를 통해 광복 70년을 통일 준비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담당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도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되는 고견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통일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준비한 ‘국민공감대 세미나’가 국민들의 통일을 향한 염원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5년 9월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 ■

여성과 평화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김은주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 본 발표문은 2014년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 수탁과제로 진행되었던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형성연구』 중 <여성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김은주, 장혜경, 유시은)>을 발췌, 보완하였음.

1. 서론

독일인에게 있어 통일은 현재형이지만 우리에게 통일은 여전히 미래형이다. 그래서 통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우린 언제쯤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독일은 지난 40년 동안 체제와 이념이 달라서 생긴 동서독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통일의 시기는 독일인들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통일을 할 것인가는 일반 국민의 소관사항이 아닐 수 있다.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 38선이 무너지고 양국의 대표들이 악수를 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통일이라 부르게 될 지도 모른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통일이후 만들어갈 통일한국사회를 준비하는 일일 것이다. 통일을 이룩한 독일이 지난 25년 동안 해온 일들을 우리는 다가 올 미래의 통일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이다.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독일통일 4주년 기념식에서 “서독의 풍요가 단 4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동독인들이 납득할 때 그리고 동독인들이 40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서독인들이 이해할 때에야 인간적 통일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콜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통일은 ‘제도’나 ‘체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정신’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통일이후 독일이 겪었던 내부적 갈등과 균열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미래 통일한국을 위해 화해와 치유, 평화와 통합을 위한 통일준비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통일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과정이다. 통일은 단순히 동일한 제도와 정치경제적 구조를 형성하는 체제통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체제 내에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상호 인정과 동질화를 추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통일준비의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준비는 체제, 이념, 세대, 계층 등 다양한 사회적 층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와 화해를 촉진하여 내적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준비론’과 ‘작은 통일론’은 비군사적이고 비정치적인 생활 담론과 실천담론을 실행하여 남북한 주민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념과 정치군사문제를 중심으로 한 통일논의는 남북한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에도, 나아가서는 통일기반조성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 민생, 문화 등의 영역에서 실천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만남을 촉진하고 물자와 정보, 기술 등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내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박종철, 2014:18-21).

그동안 여성들은 환경, 민생, 문화 등의 영역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화해협력의 역량과 경험들을 축적해왔다. 남북한 주민의 첫 만남도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여성들이 물꼬를 연 것이다.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남북한 여성으로서의 공통 경험들은 남북교류를 촉진하여 작은 통일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준비 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통일준비와 작은 통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을 체제통합이나 영토통합이라는 정치적인 문제로만 인식하게 되면 통일은 나와 무관한 영역이자 무관해지고 싶은 영역이 되어버린다. 통일의 효과보다는 통일의 정치 경제적 비용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은 여성을 비롯한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바꾸고 재구조화하는 일로 인식하게 되면 나와 내 가족의 참여 없이 진행되는 통일 논의는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 통일은 나와 내 가족의 삶의 조건, 여성들의 삶의 조건과 환경을 총체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성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준비의 의미와 실천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왜 여성이 통일준비과정에 참여해야 하는지, 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평화통일준비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성인지적 통일기반 조성, 탈북여성 및 북한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제고, 국제평화여성운동과의 연대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평화통일과 여성

1) 평화운동의 주체로서 여성

세상 사람들은 모두 평화를 갈망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선 전쟁과 폭력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들 모두는 각자 자기마음에 더 드는 평화를 원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잔혹하게 파괴하는 전쟁과 폭력들이 ‘그들의 마음에만 드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평화는 평화에 의해서 지켜지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평화운동의 제일원칙이 너무나 쉽게 무시되고 있다.

평화에 대한 외침과 갈망이 크다는 것은 그 외침과 갈망의 무게만큼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미한다.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60년이 지난 우리의 남북관계가 이와 같을 것이다. 평화에 대한 위협이 크기에 평화를 더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분단이 낳은 전쟁은 분단을 극복함으로서 완전하게 종식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는 것은 단지 분단극복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평화 때문만이 아니다. 분단극복의 과정, 즉 통일의 과정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결과로서의 평화 보다 과정으로서의 평화가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이다.

여성이 통일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통일준비과정에 보다 많은 평화주의적 관점과 실천들이 집중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교회여성들을 중심으로 원폭피해자운동, 반전반핵운동 등 평화운동을 시작하였고¹⁾ 그 이후 여성이 주도하는 평화운동은 1) 방위예산 삭감, 무기수입 등을 반대하는 군축운동 2) 걸프전쟁, 아프간전쟁 등을 반대하는 반전운동 3) 남북여성교류, 북한여성지원 등 통일운동 4) 기지촌 여성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인권운동 5) 소파개정을 위한 법제운동 6) 평화교육,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등이 있다(김엘리, 2002:3). 평화통일준비를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평화운동을 해온 여성들의 이러한 실천과 경험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들의 남성과 다른 경험에서 나온 평화감수성이 요구된다. 여성들의 평화감수성에 대해 본성상 그렇다는 이들도 있고 사회화의 결과라는 이들도 있다(정현백, 2001:62-63).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더 평화감수성이 높다는 주장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평화지향성이 어디에서 왔든 실제생활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더 평화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여성들의 삶의 양식이나 노동방식은 평화운동의 근간이 되는 돌봄과 배려에 기초한 것들이 많다. 이러한 모성적 사고와 돌봄의 윤리는 배려와 관용을 촉진하고 전쟁과 폭력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한 화해와 협력을 다지는 자양분이 된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통일운동에의 참여가 절실한 것이다.

이처럼 평화운동의 경험이 많고 평화지향성이 높은 여성의 주도하에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결합이 필요하다. 진영논리로 정치화되고 이념화된 통일운동에 평화의 리더십인 돌봄의 윤리를 결합하여 전쟁과 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갈등을 제거하고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 일은 어느 일방만의 노력 으론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여성들이 함께 평화를 이야기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남성 못지않게 군사화 된 북한여성들의 모습들은 과연 우리 여성들이 꿈꾸는 평화를 북한여성들도 꾸고 있는 것인지, 선군정치로 훈련된 북한여성들이 말하는 평화가 우리 여성들이 외치는 평화와 같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남북 여성들이 함께 평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여성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여성의 일상적인 삶에서 모든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서야 한다.

1) 여성들은 1970년대부터 원폭피해자운동, 반전반핵운동 등 평화운동을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는 반전 반핵운동, 평화군축운동, 방위비삭감운동 등 평화통일운동을 본격화하였다. 7-80년대의 평화운동은 한국교회여성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조영주, “분단시대극복을 위한 여성의 역할”, 2015 민화협여성위원회 워크샵).

2) 통일운동의 객체로서 여성

여성들은 평화운동의 주체나 평화 지향적 존재로서 혹은 평화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며 실제로 평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왔다. 이에 반해 통일운동의 장에서 여성들의 존재와 역할을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여전히 통일운동이나 통일담론, 통일정책 등은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여성들은 수동적인 존재로서 객체이자 대상으로 남아있다. 물론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나 여성 활동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2014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박명규외, 2014:37), 여성들의 통일의식은 남성들에 비해 낮다. 통일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남성은 61.9%, 여성은 49.6%가 매우 혹은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12.3%의 남녀 성별격차를 보여주었다. 통일이 필요 없다는 회의적인 인식도 남성 18.4%, 여성 25%로 여성들이 높게 나왔다. 이처럼 여성들의 통일의식이 낮은 것은 여성 스스로가 통일이나 남북문제를 남성의 영역으로 여기는 성별 분업적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남성과는 다른 사회적 경험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였고 이것이 낮은 통일의식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여성들의 일상적 삶에서 경험하는 자녀교육, 일자리, 돌봄, 폭력 등의 문제와는 달리 통일이나 남북관계의 문제들은 여성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관련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들의 낮은 통일의식은 통일의 이익에 대한 낮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위의 통일의식조사는 통일이 남한사회와 개인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질문하여 통일편익에 대한 기대감을 알아보았다. 남한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에서 남성은 각각 60.2%와 32%, 여성은 50.5%와 21.1%로 남한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들보다 10% 정도 통일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다(박명규외, 2014:52). 남녀 모두 통일이 우리사회에는 이익이 될 수는 있어도 남녀 각각의 개인에게 이익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더 많았다. 특히 개인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에 있어 남성들은 3명 중 1명인데 반해 여성들은 5명 중 1명 정도만이 통일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즉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통일이 여성들의 삶에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들이 통일문제나 통일운동, 통일정책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아닌 객체로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여성들의 삶의 경험이 다른 것에서 기인한 정책 및 이슈 선호도의 차이와 통일이 여성들의 삶에 큰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인식들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여성 개개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나 여성운동 차원에서도 여성관련 이슈들과 통일 및 남북문제들을 결합시키고 연관 맺기를 위한 노력들이 부족했다. 또한 여성들 스스로가 통일문제는 민족적 과제로 성별인식이나 성별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당위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데 집중되면서 통일은 통일의 그날이 아니라 그날 이후의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설계하는 일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낮은 통일의식은 통일은 여성과 무관한 것이라는 의식 그리고 통일과 무관하게 살고 싶어 하는 바람이 상호 작용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 전자는 통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후자는 통일에 대한 거부감에서 야기된 감정일 것이다. 물론 이는 비단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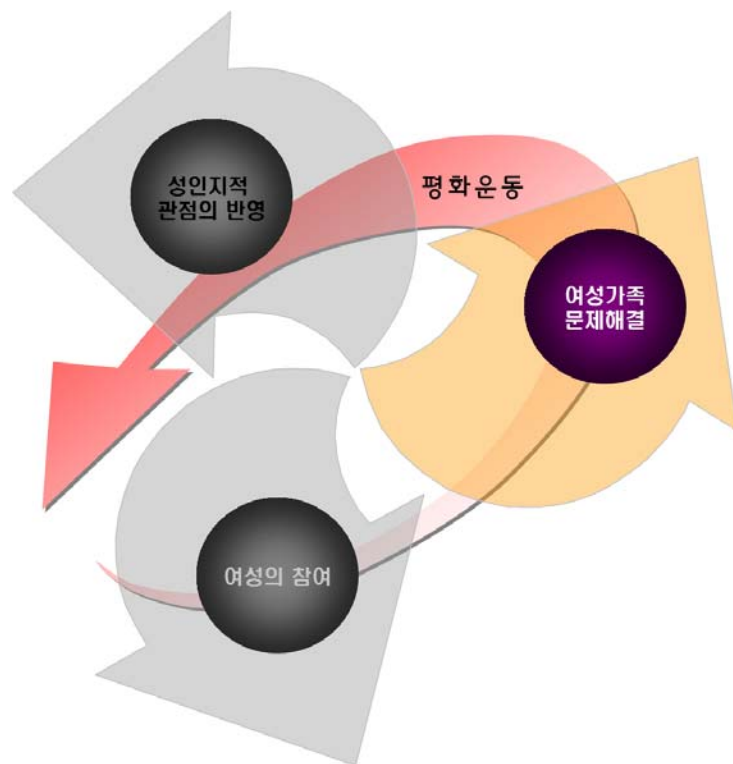
통일은 여성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통일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고 얼마나 참여하는가에 따라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의 성별 불평등구조가 악화될 수도 혹은 개선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통일의 명분은 남북한의 가부장적인 사회문화 속에 내재해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전통과 민족의 동질성이라는 이름으로 재생산될 우려가 적지 않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 아니라 여성인 나의 참여로 인해 통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통일국가는 남녀가 공히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즉 보다 성 평등한 사회와 국가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의 통일준비는 남북한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가부장성과 성차별을 해체하고 정치경제사회 전 영역에 걸쳐 여성의 이해와 권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통일은 추상적인 이론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을 살고 있고 내일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실천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논의는 오늘 이 시각 남북한에 나뉘어져 적대적으로 살고 있는 남북한 주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 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주도하는 통일이야기는 체제 통합적 논의를 넘어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북한여성들의 생활과 문화, 가치관을 이해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 성 평등한 통일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3. 여성평화통일준비 3대 기본원칙

그동안 통일 분야는 운동이든 정책결정과정이든 남성들의 영역으로 여겨졌고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배제되어왔다. 체제통합과 같은 거대담론 중심의 통일논의는 젠더적 접근과 여성주의의 개입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여성관련리제들은

주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통일의 명분은 남북한의 사회 구조와 문화 속에 내재해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들이 전통과 민족의 동질성이라는 이름으로 재생산될 우려가 적지 않다. 따라서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들의 통일준비는 평화주의적 관점과 평화운동의 토대위에 다음과 같은 3대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여성의 참여확대, 둘째 여성 및 가족문제의 해결, 셋째 성인지적 및 여성주의적 관점의 반영이다. 3대 기본원칙은 여성을 “통일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과 더불어 통일준비과정 자체를 “여성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일준비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남북한 사회의 여성가족문제를 해결하고 정책결정과정에 남녀의 다른 경험과 시각을 반영하여 성차별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북한 여성들의 권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림 1] 여성평화통일준비 3대 기본원칙

1) 여성의 참여 확대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참여이다. 여성의 참여는 단지 여성들의 통일의식이 낮아서나 실질적으로 통일운동이나 논의에 여성들이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통일준비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여는 시민의 권리이며 목표이다. 특히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논의하는 통일준비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논의와 통일운동 그리고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정책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통일준비과정에서 ‘인구의 절반, 시민의 절반’인 여성의 참여는 성숙한 통일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된다.

둘째, 여성은 남성과 다른 특별한 경험과 가치를 가진 집단이다. 물론 모든 여성들이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겪는 동일한 경험 즉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차별과 갈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여성들은 차별과 갈등해소를 위한 화해협력의 역량을 키워왔다. 통일준비과정은 사회통합의 과정이며 화해협력의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돌봄의 리더십을 요구한다. 따라서 통일준비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화해협력의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자녀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점에서 여성들의 통일의식 제고는 여성 개인의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통일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셋째, 참여는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이는 통일논의와 통일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구경꾼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배제는 무관심과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여성들의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이 참여를 통해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 아닌 인구의 절반, 시민의 절반인 여성들의 참여로 인해 통일준비의 범위가 확대되고 통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여성가족문제의 해결

여성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준비는 남북한 여성들의 실질적인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야 한다. 독일 통일에서 얻은 교훈은 통일과정과 그 이후 통합과정에서 여성이 최대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독일은 통일이후 가족의 해체와 여성들의 불평등한 지위가 심화되었고, 특히 동독여성의 지위가 현격하게 약화되었다. 통일한국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성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여성가족 정책개발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장혜경외, 2014, pp.2-3). 따라서 여성가족문제에 대한 관심은 통일 후 실질적인 사회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길이다.

남북한 사회와 제도들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사항은 가부장적 가치관과 문화이다. 분단 70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에 의해서 정치경제체제가 형성되고 의식화가 진행되었지만, 가족주의 안에서 남북한 여성들은 부계 가족의 이익을 위해 맡겨진 역할을 해내야 했다. 남한은 자본주의적 산업화 속에서 북한은 가족국가적 사회주의 속에서 남북한 여성들은 또 다시 가족주의 안에서 도구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의 도구적 위치는 여성으로 하여금 항상 어머니로서 존재하고 슈퍼우먼 콤플렉스를 겪도록 하고 있다(김재인·장혜경외, 2002:88; 장혜경외, 2014:20).

남한은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와 성장중심의 경제발전과정에서 핵가족으로의 전환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통적인 가족 기능이 축소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확산과 개인화의 경향, IMF경제위기, 노동시장의 구조변동 등의 사회변화를 경험하면서 가족은 핵가족의 전형에서 벗어나고 있다(백진아, 2009:222). 이로 인해 저출산의 문제, 취업여성의 자녀양육의 문제, 이혼율 증가로 인한 가족 불안정성의 문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부양의 문제 등 개별가족의 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여 여성 및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해지고 있다(함인희, 2008:31).

북한은 사회주의 산업화과정에서 부부가 같이 노동하고 자녀양육은 사회화된 가족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가족들이 맞벌이 부부이면서 자녀양육이 사회화되었다고 해서 부부간 성별분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취업주부들에게는 직장과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는 계속되었다. 1980년대 말 경제위기의 시작과 1990년대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의 배급제가 작동하지 못하면서 북한 여성들은 과중한 부담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김재인·장혜경외, 2002:86; 장혜경외, 2014:20). 국가공급의 식량을 비롯한 생활비(임금), 연로연금, 무상치료, 무상교육 등의 제1차 사회안전망이 붕괴되어 국가보장의 의료교육 등 각종 사회보장서비스가 개별 가정차원에서 해결되면서 가정마다 생계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공장 및 기업소의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직업장에 나가야 하는 남편에 비해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아내가 시장에 나서면서 여성이 가족경제 운영의 주체가 되었다(양옥경·이미경, 2010:191-201).

북한여성들이 남한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전통적인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남북한 사회 모두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 약화와 여성의 역할 제고라는 추세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문제는 남북한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통일준비과정에서 통일 전후에 나타나게 될 여성가족 문제들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준비에 있어서 여성가족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는 남북한 여성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난 수차례에 걸친 남북한 여성교류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북한여성들은 남한여성들의 페미니즘 안전이나 여성운동의 의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로서 이미 여성해방이 달성되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으로서의 공통의 경험, 여성건강이나 자녀양육 등과 같은 여성가족문제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과 공감을 표명하고 있다(조영주, 2012:262-264). 따라서 통일준비과정에서 남북한의 여성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은 남북한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임과 동시에 남북한 교류를 촉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3) 성인지적 및 여성주의적 관점의 반영

여성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준비에 있어 여성을 통일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통일 자체가 여성 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통일은 남녀가 공히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즉 보다 성 평등한 사회와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남북한 사회의 가부장성과 성차별적인 관행과 제도를 해체하고 남북한 사회의 성 격차(Gender Gap)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통일준비과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이 주도하는 평화통일 준비과정에는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성인지적 관점(性認知的 觀點, gender perspective)은 정부정책추진과정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나 정책에 포함된 특정 개념이 특정 성(性)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여성과 남성이 지닌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형성된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가 제도나 정책설계에 반영 되도록 하는 것이다(ko.wikipedia.org).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의 통일준비는 남북교류 및 통일 관련 정책추진과정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가 3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또한 남북교류 및 통일 관련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또한 여성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준비는 남북한 여성교류를 통하여 북한 여성들의 권리의식을 촉진하고 북한 내 여성중심의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남한 여성들에 비해 북한여성들은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한 순응성이 높아 여성으로서의 권리의식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북한 여성의 권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페미니즘 안전이나 여성운동 의제를 전면으로 내세우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는 여성문제가 공론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직업이나 생활의제, 즉 여성이자 같은 직업종사자로서 공통으로 겪는 경험을 토대로 교류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 여성들 스스로가 여성으로서의 권리의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여성평화통일실천 5대 과제

1) 평화통일공감대 형성

여성들의 평화통일공감대 형성은 통일의식 제고와 민주시민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차적으로 통일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은 여성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삶의 조건들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라는 인식, 즉 통일에 대해 여성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얼마나 참여하는가에 따라 남북한 사회의 성별 불평등구조가 악화될 수도 혹은 개선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의 민주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사회에는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서로 다른 의견으로 남남갈등이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들의 소통을 통하여 바람직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그리고 이로 인한 문화적·의식적·도덕적 차이는 통일한국사회의 갈등과 균열을 초래할 것이다. 남북한의 문화에 대해 우열을 따지는 적대적 인식을 청산하고 다양한 문화로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가치의 내면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자유와 평등, 배려와 관용, 인권, 다양성 인정 등 민주적 시민의식 고취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가. 평화통일실천 여성사회협약 추진운동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는 한반도 분단과 나의 삶 그리고 통일과 나의 삶에 대한 연관 짓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에 한반도 분단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여성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조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과 평화통일에 대한 관계 맺기는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작은 실천들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야 평화통일운동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 여성의 일이 될 수 있다.

그동안의 평화통일운동은 소수의 통일관련 관변단체나 진보단체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왔고 실제로 평화통일운동은 일반국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이념논쟁의 장이 되곤 했다. 따라서 기존의 평화통일운동은 대부분의 국민들, 특히 대다수의 여성들과의 관계 맺기에 실패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념과 진영논리에 빠진 평화통일운동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방의 성과에 대한 거부와 배제를 반복하여 前 정권에서 이루어놓았던 남북한의 성과들은 계승 발전되지 못한 채 반쪽의 역사로만 존재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평화통일운동이 필요하다. 이념논쟁의 진앙지로서의 평화통일운동이 아닌 생활의제를 중심으로 실천 가능한 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비정치적·비군사적 사안들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상호배제가 아닌 역대 정부들의 남북한 교류 성과들을 명시적으로 계승 발전하는 성숙함을 담지해야 한다.

평화통일실천 여성사회협약 추진운동은 여성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평화통일운동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천 가능한 약속들에 대한 합의가 평화통일실천 사회협약이다. 사회협약을 만드는 과정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계층, 이념, 종교 등 다양한 범주의 여성들이 평화통일준비를 위해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남북한의 여성가족문제 해결 및 대북 인도적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평화통일실천 여성사회협약 추진협의회 구성

- 구성 : 일반여성 및 여성단체, 여성전문가 등 참여
- 활동 : 평화통일실천 여성사회협약 내용 구성 및 운동 추진전략 수립

☐ 평화통일실천 여성사회협약 대토론회 개최

- 방법 : 2단계로 추진
 - 1단계: 일반여성 중심의 지역별 토론
 - 2단계: 지역별 토론결과를 토대로 한 전문가 집단의 토론으로 구성
- 주제 : 남남갈등해소 및 남북여성교류활성화방안 모색
- 효과 : 대토론회 결과를 중심으로 평화통일실천 여성사회협약 내용구성

나. 민주시민교육강화

민주시민교육은 사회구성원의 정체성 혹은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다. 정치적 측면은 정치사회화 과정을 의미하며, 구성원 사이의 가치체계, 신념, 감정적 태도, 행동 양식 등에서 상호 타협이 가능한 공동체 범주를 유지하려는 태도 및 노력이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타협과 양보가 가능한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여 사회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다. 달리 표현하면, 정치제도화의 발전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통합성을 심화시키는 정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남재봉, 2012:1-21).

독일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동독주민들의 광범위한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서독정부와 서독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민주적 공동체와 제도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이었다.²⁾ 독일은 통일 전부터 연방 및 주정부 정치교육원을 설립하여 정부차원에서 민주시민의식교육을 추진해왔다. 통일 후 연방 및 주정부 정치교육원은 구동독지역 주민의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동서독 주민 간의 사회 심리적 통합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준비를 함에 있어서 북한주민을 선도할 수 있도록 남한사회와 남한 시민들의 더 깊은 민주주의의식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통일 후 직면하게 될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균열을 고려하면 초당적이고 정치중립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독일의 경우처럼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절실히 요구된다.

여성을 포함한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강화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민주시민교육원 혹은 정치교육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타협과 양보가 가능한 근거를 확보하여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시민적 덕성 함양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2)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남북여성교류 활성화는 남북한 여성들의 상호인식과 신뢰, 이해의 축적을 위해 매우 중요한 통일준비 과제이다. 남북한 여성은 남북한의 사회제도적 차이 외에 가정에서의 역할인식 및 가치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여성들을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과 제도에 의해 남녀평등을 실현하였다고 하면서도 여성의 권리, 복지 등과는 거리가 멀다. 반면 남한은 시민운동이 여성 및 가족 관련 복지정책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남한 여성들은 주체적으로 여성운동을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제도정치와 정부 등 공적영역에서의 남녀평등권 보장과 실현을 요구해 왔다(장혜경외, 2014:67).

따라서 남북여성교류 활성화는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일기반 조성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우선적 과제로 생활의제 중심의 교류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여성생활문화추진협의체 구성이다.

가. 생활의제 중심 교류

남북여성교류는 민간교류차원에서 인도적 지원(감자보내기, 분유지원, 의약품 보내기 등), 경제협력활동, 학술교류 등의 활동이 이루어져 왔지만 제도적 기반의 문제, 교류를 위한 공동

2)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사회과학연구센터(2013.), 『독일통일이후 동서독 주민의 의식변화분석(1990~2010)』, 통일부.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사회과학센터는 1991년 동서독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설립되어, 독일 통일과 관련된 체제전환과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 테마로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현재까지 구 동독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 이후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제 발굴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한인영외, 2008). 교류협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여성들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인식과 입장의 차이는 남한과 북한의 차이, 남한 내부의 차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안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교류협력의 내용을 풍부히 하기 보다는 입장의 차이만 확인되는 결과를 낳았었다.

그러나 남북한 교류협력은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한계가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남북한 여성들의 생활상과 관련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생활의제는 남북한의 체험적, 실천적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남성중심의 정치, 산업경제 중심의 교류로부터 문화, 생활교류로의 확대를 가져옴으로써 체제전환 사회의 통합에 실질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 ‘스킨십 증가’ 프로젝트 추진

- 관광 촉진을 통한 일반 여성의 북한 체험확대, 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행사에서 여성공동응원단 결성 등을 추진
- 남북한 여성생활 축제 문화행사로 추석과 단오 등에 남북여성 합동문화제 개최, 의생활 및 식생활문화 경진 개최 등을 추진
- 이산가족 상호방문 및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협력 도모
- 일·가정양립, 성 역할 고정관념, 노동시장 성차별, 교육, 외국어, 여성건강이슈 등의 남북 여성들의 생활경험에 대한 공동의제화 및 공론화 장 마련

□ 개성공단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 개성공단 근로자 70%가 여성으로 대부분이 가임기 여성들임.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남북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상호교류의 모색

□ 남북여성보건의료인 교류 추진

- 취약한 북한의 보건의약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보건의료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의 상호교류 모색

□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 여성추진위원회 구성

-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 남북여성 공동사업추진위원회 구성하여 3.1운동관련 남북역사연구 및 토론회 등 개최

나. 남북여성생활문화추진협의체 구성

남북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은 남한과 달리 민간차원의 여성단체가 없고 정부차원의 여성동맹이 유일한 여성조직이다. 1990년 이래 남북한 여성교류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토론회 및 실무협의”, “남북여성대표자 회의” 등과 2001년 남북여성통일대회 개최(금강산, 남한 300명, 북한 300명, 일본 및 독일여성 50명 내외), 2002년 남북여성통일대회 미술전, 2005년 이후 북한 유물 교류를 위해 평양 및 개성 등 장인들과 예술가들의 일시적 교류, 2014년 남북여성교류(3월, 심양, 정신대 문제),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 등이 있었다.

여성의 역할은 정부 간의 교류에 막힌 문제를 소프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인권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2001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게 된 것이나 2010년 ‘녀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한 것은 이러한 한 예이다. 또한 1991년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통일부, 2008)를 개최했던 남북 여성들은 일본 여성들과 함께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 당국간 대화를 하게 하는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남북한 여성 교류가 통일기반조성의 중요한 초석인 바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접촉을 도모할 수 있는 추진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 구성

- 정부, 정당, 사회단체, 지역별 여성, 계층별·직업별 여성계 포괄 구성

□ 기능 및 역할

- 통일한국 유물유적 역사관 조성(연구조사, 데이터베이스구축, 유물구입 등)
- 역사유물 교재 편찬
- 분단 전에 있는 여성 조직 뿌리 및 활동자료 찾기
- 1325 국가행동계획 추진 지원
- 남북예술교류단체와 통일부의 연례회의 개최
- 통일문제에 대한 정보교류와 상호교류 의제설정 및 실천전략 모색
- 북한여성 및 영유아, 노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화(남북협력기금)
-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및 국제여성들과 연대
- 2020년 제5차 유엔세계여성대회 개최 유치노력(서울, 평양, 제3지역 등)

다. 북한 여성사 관련 유물유적 공동연구 및 조사

남북한 유적유물 공동발굴조사는 2003년 금강산 신계사 발굴조사를 필두로 시작하였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금강산 신계사 공동 조사와 복원을 통해 초창기 불전 유구와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의 유물을 발굴하였고 2012년 8월에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 5주년을 기념하여 남북 합동법회까지 개최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개성 만월대 유적 공동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총 4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고려 궁성의 건물 배치 양상과 명문 기와, 원통형 청자 등 다양한 유물이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개성 만월대는 고려왕이 정무를 보던 정궁으로 2013년에는 ‘개성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과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단절되었다가 최근 (2014년 7월) 3년 만에 개성만월대 유적 공동발굴조사가 재개되었다.

최근 10월 24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남북 및 국제사회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김 제1위원장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는 애국사업’으로 계승발전을 지시했고 ‘온 겨레가 민족 중시의 역사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며 민족문화유산과 관련한 학술교류도 많이 해 단군조선의 역사를 빛내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10월 30일). 또한 북한은 프랑스와 공동으로 개성성(城)을 발굴하는 등 유물유적 발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 역사 공동조사 및 발굴사업이 다시 재개되고 북한의 민족역사의 유물유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 고구려 및 고려, 발해 등의 시기에 살았던 여성들의 역사적 유물유적에 대한 관심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한 여성사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여성사 관련 유물유적 공동조사를 착수하여 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국립여성사박물관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내 여성역사에 대한 연구와 자료수집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2013년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을 통해 국립여성사박물관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국립여성사박물관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이다. 국립여성사박물관은 한국 역사 속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여성사박물관으로서 여성 관련 자료의 보고이자 정보의 글로벌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고려 및 고구려시대의 여성역사관련 사료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은 13개의 국립박물관이 있으나 유물에 대한 체계적 정보부재와 경제난으로 인한 많은 유물들이 도굴로 유출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위해서라도 유물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립여성사박물관은 미래적 가치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또한 통일에 대비해 남과 북을 아우르는 여성사 유물을 수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 여성사 유물에는 국보급, 준 국보급 문화재 유물을 포함해, 공예품, 서화,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유물들 또는 예술작품은 사상이나 이념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통일의 물꼬를 트는 작업에서 여성관련 문화재와 유물의 수집 및 발굴은 학술교류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기점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지에 흩어진 여성 유물을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북한 지역 및 글로벌 여성사 관련 유적지 공동조사 및 발굴

- 국보급, 준국보급 유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사유물들에 대한 자세한 연구조사 실시 (북한의 각 박물관의³⁾ 유물 숫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파악 등)
- 글로벌 여성사 유물조사 : 연해주(발해 유적 및 고려인 여성사유물), 연변(조선족 여성 사유물), 사할린(고려인 여성사유물), 미주 지역 등

□ 한반도(남북) 여성사 관련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축

- 과거의 유물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문화재가 유출시 대비

□ 현대 여성장인 및 예술가들 간의 작품교류와 매입추진

- 자수, 공예품, 서화, 사진 등

3) 성인지적 통일기반 조성

성인지적 통일기반 조성은 성 평등 통일국가 청사진을 구축하고 통일 관련 기구의 성인지적 관점 강화와 여성 가족 관련 기구의 위상 및 역할강화에 있다. 여성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성 평등적인 관점이 통일정책에 반영될 수 없으며 통일한국의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도모할 수가 없다. 남북한 사회에서 여성은 정책대상자 또는 사회정책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존재하기는 했지만 제도 구성 및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남한사회도 여전히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고 북한사회 또한 정치학습과 가족법 등에서 불평등요소가 강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두 사회는 가부장적

3) 조선중앙력사박물관(평양), 향산력사박물관(평안북도), 청진력사박물관(함경북도), 함흥력사박물관(함경남도), 신의주력사박물관(평안북도), 조선미술박물관(평양), 사리원력사박물관(황해북도), 해주력사박물관(황해남도), 고려박물관(개성), 원산력사박물관(강원도), 강계력사박물관(자강도), 조선민속박물관(평양), 평성력사박물관(평안남도) 등 13곳

문화와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있다. 따라서 통일과정에 여성들의 관점이 반영되는 정책의 힘으로 통일 이후의 가족의 삶과 여성지위 관련 많은 한계들이 사라질 수 있다 (이금순·장혜경외, 2009: 122-123; 장혜경외, 2014:70).

가. 성 평등 통일국가 청사진 및 로드맵 구상

독일통일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매우 급박한 통일과정은 여성문제를 주변화 시켰다. 여성정책과 성 평등 의제에 대한 준비된 청사진이 없는 경우 여성정책은 후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북한 모두 가부장적 문화와 가치관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성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많은 대안들이 통일국가수립 과정에서 법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 평등 통일국가에 관한 청사진과 로드맵이 필요하다.

통일국가가 여성정책과 성 평등 의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실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이 나와야 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 여성들의 동등한 지위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리고 남북한 사회의 남녀불평등과 성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 인지, 그리고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형성된 상이한 남북한여성들의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통합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남북여성들의 논쟁적 의제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예측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여성가족관련 법제도와 현실을 비교 연구하여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성 평등과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통일국가의 비전과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평화통일준비를 위한 남북한 여성교류를 활성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나. 통일 관련 기구의 여성 및 성인지적 관점 강화

통일분야에서의 여성정책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한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 동 기본계획 제 1~3차 계획기간 중 비교적 단계적인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정치상황 변화로 실제 정책은 가시화되지 못하였고 3차 기본계획기간 중에는 통일분야에서의 여성의제가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또한 남북 간의 제반 관계 및 협력의 근거가 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년 제정), 『남북교류협력기금법』(1990년 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05년 제정)이 동 계획 기간 중 수차례 개정 되었지만, 이러한 법제 내용에 여성의 교류나 참여를 명시한 항목은 없다(김태홍·장혜경외, 2012:169-170).

따라서 통일 관련 기구에 여성의제를 다루는 분과나 회의기구 설치 등으로 남북대화채널에

기여하고 통일에 대비한 근본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부분적으로 관련 사업들이 관계부처에서 소수 이루어지고는 있다.

- ☐ 통일부 및 통일준비위원회의 여성참여확대 및 전담부서 설치
 - 통일준비위원회 및 통일정책 분야의 여성가족의제 전문가 및 여성 확대
 - 통일부 내 여성담당관 제도마련

- ☐ 통일준비의 모든 과정에서 여성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운영
 - 평화 및 통일운동을 하는 여성단체와 협의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독자적 담당기구 설치
 - 남북협상 및 정부대표단 여성비율 제고
 - 통일 및 외교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및 각종 관련위원회 여성비율 제고와 정부의 각 교류 협력 기구에서 여성참여 보장

- ☐ 국회의 국방, 외교, 통일분야의 성 인지적 의정활동 영역 확대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이 유엔안보리결의1325호에 대한 인지와 국가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점검

- ☐ 통일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여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협약 마련
 - 사회적 협약을 통한 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모 (정부의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 통일 투자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마련, 여성의 역할 등)

다. 여성가족부의 평화통일 관련 역할 강화

통일 정책에서 여성들이 소외되고는 통일정책의 확고한 추진기반 구축은 어렵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를 통해 통일정책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관련 기구의 평화통일 추진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현재 여성가족정책의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역할 및 책임과 위상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평화·안보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 접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여성가족부내 여성가족통일담당관 제도마련

□ 주요기능

- 1325 국가행동계획의 국내외적 추진전략 수립
- 남북여성교류경험에 대한 백서 및 세부적 메뉴얼화
- 여성통일 액션플랜 만들기
- 북한여성 및 영유아, 노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략연구
- 젠더개발협력부분과 연계 도모
-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및 국제여성연대 지원
- 통일한국사회의 여성가족관련 정책 선제적 준비⁴⁾
- 여성평화안보 전문가 대상 및 일반대상 통일 마인드 교육 실시
- 여성/어머니를 위한 통일교실의 다양한 방식 운영

4) 북한이탈여성 및 북한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제고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1년 2만 명을 넘어섰고 2015년 6월 현재 28,133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 중의 70%이상이 여성들이다(통일부, 2015). 1990년대 중반 사회주의 붕괴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북한의 식량난은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300만의 아사자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인접국인 중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급증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이탈여성들은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두만강을 건너게 되었다. 초기 북한이탈여성들의 도강은 중국 내 친척으로부터 식량을 구해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가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여성들의 기대와 달리 중국 친척들의 도움은 한계가 있었으며 중국내 남초 현상으로 인해 불법적인 매매혼으로 이어졌다(김태현, 노치영, 2003, 104-105).

1990년대 중반 연이은 자연재해로 북한당국은 더 이상 배급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장사라는 상행위를 시작하였다. 현재 북한 전역에 400여개가 넘는 장마당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시장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북한시장의 중심에 여성이 서 있다. 북한남성들은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교화소를 가던가 아니면 생활총화를 해야 하는 등 통제를 받는데 반해 결혼한 북한여성들은 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게 되었다. 법적으로도 북한의 장마당에서

4) 독일의 통일 이후 정책들은 정부차원에서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서독여성들이 취했던 입장과 과제가 중심이 되는 정책추진으로 동독여성들이 통일 전에 당연히 누렸던 모성보호나 육아정책, 한부모(편모) 가정 보호정책, 여성의 취업보장정책 등이 통일과정에서 보장되지 못하여 많은 갈등을 겪어야만 하였다. 25년이 되어가는 독일 사회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회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어 통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처럼 기본적으로 예견되는 갈등들이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장애가 될 것이다. 준비되지 않으면 이후 통합의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볼 때 독일의 사례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장혜경외, 2014;59-60).

장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만 50세 이상의 기혼여성에게만 주어져 있다.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연령제한을 풀어 젊은 여성들도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사회가 기혼여성들에게만 시장참여를 허용한 것은 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지만 비사회주의적인 영역인 시장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남성의 참여보다 덜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여성들의 시장참여는 처음엔 집에서 만든 음식이나 집에 필요 없는 물건들을 내다 팔던 것에서 시작하였으나 현재 북한여성들은 차떼기 도매장사나 밀수, 무역 혹은 소은행(대리결제), 돈주 등의 형태로 시장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남편들의 생활비만으로는 가계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북한여성의 경제활동은 부수입이 아닌 가족의 생계전반을 책임지게 되었다. 즉 북한여성들이 실질적인 가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사회에서 시장의 확대는 북한여성들의 경제참여와 역할을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여성들의 일상적인 생활에도 적지 않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여성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준비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여성들의 변화된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온 통일세대인 북한이탈주민여성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북한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가. 남북여성가족위원회

북한이탈여성들이 고향을 떠나 중국에 이르기까지 경험하는 가족과의 이별, 부당한 대우, 인권유린, 매매혼, 성적 수치감, 강제송환의 위험 등을 신체적·심리적인 상처로 남게 되며, 결국 한국행을 결정하게 된다(이금순, 윤여상, 2006, 242-249). 북한이탈여성들에게 남한 이주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가족과의 이별이라는 고통의 시작이기도 하다. 많은 북한이탈여성들은 중국 체류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으나 언제든 북한의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신변의 안전을 위해 이주한 한국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은 가족을 재구성하거나 재결합을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가족문제를 겪게 된다.

첫째, 북한이탈여성들은 가족과의 재결합에 성공하더라도 장기간 해체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에서만 아니라 제3국 체류 과정에서 형성된 가족과도 해체된다는 점, 셋째 부부 간의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갈등 문제, 넷째 북한이탈가족의 대화 단절과 여가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 발생, 다섯째 북한이탈 여성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문제 등을 겪고 있다.

이상의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사회에서 겪는 적응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가족 구성원 안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이탈여성과 그들 가족의 안정성은 남한에 미리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들의 적응에 단초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이탈 가족의 안정성과 탄력성은 남한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사회 통합을 긍정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북한이탈여성들의 가족안정성을 높이며 남북한 가족이 서로 공감하며 화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여성가족부 주도하에 남북여성가족위원회 구성
 - 북한이탈여성과 남한여성들이 함께 참여
 - 북한이탈여성의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논의
 - 북한이탈여성과 남한여성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 북한이탈주민집중거주 지역 내 남북가족소통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협조 필요
 - 북한이탈주민집중 거주지역의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으로 구성
 - 북한이탈주민만이 아니라 공동거주 남한주민의 가족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 공동 모색

나. 북한이탈여성들과 여성단체간의 교류 활성화

북한이탈여성과 여성단체간의 만남과 소통은 여전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음식 만들기, 합창 등 문화를 매개로 모임에서부터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에 대한 대화 모임에 이르기까지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정착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류는 남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상호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 유대와 자매애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북한이탈여성들과 여성단체들 간의 교류 활성화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여성단체들은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매애에 기초하여 멘토(mentor)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내에 입국한 상당수의 북한이탈여성들은 과거 북한에서 경험한 생활고와 제3국 체류 중에 당한 인신매매를 비롯한 인권탄압 등으로 인해 상당히 큰 심적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국내적응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편견은 북한이탈주민임을 숨기고 취업을 해야 하고, 자녀양육 및 교육에 있어 혼자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따라서 여성단체들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자매애를 갖고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사회에서 정서적 물질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에 잔존해 있는 성차별적 관행과 문화로 인해 제3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내자의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여성은 북한사회의 변화나 북한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원이다. 분단 70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정치경제적 차이 못지않게 사회문화적 및 의식적 차원에서 이질화도 심화되었지만 그 변화의 양상과 깊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이 전해주는 정보는 개인적 경험이 너무 과장되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매우 유용하다. 평화통일 준비는 남북한 여성들의 동질성 회복 못지않게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연하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추측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들이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다르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통일된 국가에서 같은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자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과 여성단체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이질화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공존과 동질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여성들의 여성권리의식을 함양시키는 교육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는 성차별이나 여성억압의 원인을 자본주의와 경제적인 문제로 본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폐지는 곧 여성해방으로 인식한다. 바로 이러한 도그마가 사회주의에도 엄연하게 존재하는 여성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다.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문화는 시대와 공간, 체제를 초월한 것으로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와도 정합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왜곡한 결과이다.

게다가 북한은 사회전체를 아버지 수령이 영도하는 대(大)가정에 비유하고 사람들에게 아버지 수령에 대해 충성과 효성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아버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大)가정이라는 북한의 사회관은 가부장제 자체에 대한 비판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공사영역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성별분업을 정당화하고 미덕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문제를 은폐시키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북한엔 여성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성문제에 대한 사유와 성찰을 금기시하고 있다. 북한사회의 여성문제에 대한 무사유가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식 사회주의 도그마에 근거한 사유불가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거리감은 더 커졌을 것이다.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여성들의 높은 권리의식과 여성운동에 대해 한편으론 놀라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불편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북한에서의 사회화의 결과일 것이다. 통일

한국의 성 평등 사회로의 전진을 위해서는 남북한 여성들의 가부장제문화와 여성성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가부장제문화속에서 여성성은 미덕이 아닌 차별의 다른 표현임을 이해시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성단체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북한이탈 여성들이 여성권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여성단체와 북한이탈여성단체 공동 주최 남북여성문화축제

- 5월 마지막 주인 통일교육 주간에 개최
- 전시, 공연, 대회 등 다양한 형태

□ 여성단체의 전문성에 맞는 맞춤형 북한이탈여성과의 대화모임

- 여성단체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정례적인 대화 모임 개최
- 대화모임에서 나눈 자료 축적 및 공유

다. 남북한 여성 화합을 위한 컬러 리본 운동

컬러 인식리본(Awareness ribbon)은 사회적인 편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거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리본이다. 한국에서도 여러 번 리본 달기 운동이 펼쳐졌다. 2005년 11월 25일에는 납북자 송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 운동이 국내외 한인, 종교계, 한나라당 등에 의해 펼쳐지기도 하였다(조선일보, 2005년 11월 29일). 또한 2007년 8월 7일에는 평화·여성·환경·종교·문화 분야 78개 시민단체들이 ‘노란 리본 달기’ 운동을 통해 아프간에서 피납된 한국인들의 조속한 무사귀환을 염원하였다(오마이뉴스, 2007년 8월 6일). 2007년 12월 2일에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교인들이 북핵포기, 북한인권개선, 국군포로및 납북자 송환을 염원하며 트리에 노란 리본을 달았다. 2008년 11월 18일에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노란 리본달기 캠페인(Yellow Sticker Campaign)’이 벌어졌다. 최근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마음으로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이 널리 확산되었다.

정부와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표현은 국민들에게 통일 한국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희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실제로 남북 관계 개선은 없었으며,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반향을 지속할만한 동력과 실천은 미진했다. 이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주도할 수 있는 대국민 인식 리본 운동을 펼침으로써 통일에 대한 희망, 대립이 아닌 화합과 공존, 한반도의 상생번영을 제고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식 제고를 위해 “보라 리본”을 제안한다. 보라색은 남측의 파랑색과 북측의 빨강색이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화합을 상징하는 색깔이며, 치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보라 리본”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폭력과 비난을 방지한다(Interpersonal Violence and Abuse Prevention)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 남북여성문화 페스티벌 개최 시 상대방에서 화해와 치유의 의미로 ‘보라리본’ 달아주기
- ☐ 분단 및 통일 관련 기관/관광지에 ‘보라리본’ 관련 상품 전시 및 판매
- ☐ 남북회담 시 ‘보라리본’ 패용
- ☐ 대국민 ‘보라리본’ 이야기 공모

5) 국제여성평화운동과의 연대 활성화

광복70년을 맞이하고 국제적인 냉전질서가 와해된 지도 20년이 넘었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분단의 상태로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아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단지 남한과 북한의 분단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분단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국내의 동력만으로 부족하며, 주변국가와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들에 세계여성들이 함께 평화형성의 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00년 10월 무력분쟁지역의 여성에 대한 조직적 폭력이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안보리 결의 132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평화와 갈등의 금지 및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에서 여성들이 개입하는 것이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적을 담은 것이다.

국제사회에는 평화운동을 하는 여성단체들이 적지 않다. 국제화해친우회(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 평화와 자유를 위한 세계여성연합(Women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세계적인 여성조직들이 다양한 형태로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여성단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여성들의 참여와 이해를 확산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 2008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의 여성 및 평화단체들이 모여 동북아평화회의의 구성
- 2015년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참여
- 2015년 국제여성평화걷기(WCD; Women Cross DMZ)

5. 결론

분단 70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은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점차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하자는 정부의 외침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증대는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나 평화적 통일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인식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배타적인 통일논의 구조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통일논의는 소수의 지식인이나 전문가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준비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구경꾼이 아닌 주체로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인구의 절반, 시민의 절반인 여성들이 통일논의와 정책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의 무관심은 여성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통일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국가공동체의 건설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지만 그동안 여성들은 통일운동이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소외되었고 이것이 여성들의 통일무관심으로 이어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은 여성인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여성인 나의 참여로 인해 통일준비의 범위가 확대되고 통일의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

평화통일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평화통일운동이 필요하다. 평화통일실천 여성사회협약 추진운동이 그것이다. 여성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평화통일실천운동으로서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과 평화통일에 대한 관계 맺기 운동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천 가능한 약속들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합의운동으로 북한 및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남북한 여성들의 상호신뢰와 이해를 촉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여성의 평화통일공감대 제고를 위해서는 정치, 군사적 문제 그리고 체제통합과 같은 거대담론 중심의 통일논의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의제 중심으로의 통일논의를 확대해야 한다. 통일은 체제전환만이 아니라 그 체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여성들의 생활의제는 남북한의 체험적 실천적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남성 중심의 정치, 산업경제 중심의 교류로부터 문화, 생활 교류로의 확대를 가져옴으로써 체제전환 사회의 통합에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남북한 여성들의 공통의 경험, 즉 여성가족문제를 토대로 한 남북여성교류는 정치군사적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북한 내 민족

문화유산 중 여성역사와 관련된 유물 유적에 대한 남북여성들의 공동조사 및 연구는 남북한 여성교류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통일준비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민족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통일논의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에 내재해 있는 성차별적 의식과 제도들이 전통과 민족의 동질성이라는 이름하에 재생산되지 않도록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이 요구된다. 즉 통일준비 자체가 여성 친화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형성된 서로 다른 이해와 경험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통일정책의 소외지역으로 존재하는 한 통일정책의 확고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 평등 통일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만들고 통일 관련 기구에 여성의제를 다루는 분과나 회의기구를 설치하여 여성의 정치적 역할을 증대하고, 현재 여성가족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직업 및 직능별 남북여성교류를 촉진하여 북한 내에 여성중심의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북한 여성들의 권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남한여성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이 여성인 상황에서 북한이탈여성과 그들 가족의 안정성은 남한 사회의 적응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 북한 주민의 사회통합을 긍정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사회에서의 정착과정에서 편견과 가족해체, 자녀양육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남북여성가족위원회를 구성하여 북한이탈여성과 남한여성들이 함께 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성단체들과 북한이탈여성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여 북한이탈여성들의 안정적 정착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북한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가야 한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한 당국자 회담 결렬의 빌미로 작용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전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를 저해하는 집단으로 낙인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이 함께 추진하는 사회운동 즉 남북한 여성화합을 위한 인식리본 운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여성평화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평화형성의 동반자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세계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지대의 해체를 위해서는 주변국가와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요구된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국제여성평화운동그룹이나 세계여성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세계여성들의 참여와 이해를 확산시켜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구환영, 도경은(2012), “컬러리본 캠페인에 활용된 컬러가 CSR마케팅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디자인학 연구』, 10(1), 79-92
- 김도태(2012), “북한이탈주민의 시민교육 내용과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29(2), 51-68.
- 김미령(2007),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4(3), 19-39.
- 김엘리(2002), “평화운동과 여성의 힘”, 춘천 YWCA 『여성의 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고취 및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 강연 원고, 1-6.
- 김영희(2006), “북한이탈주민 가족 유형과 가족 적응의 어려움,”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논문
- 김유정(2011),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레질리언스 관점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15(1), 99-129
- 김진미(2003),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 김태현, 노치영(2003),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도서출판 하우
- 김태홍, 장혜경, 황정임, 배호중(2012), 『최근 10년간 여성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박명규외(2014), 『2014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박영숙(2013),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 『교정복지연구』, 30, 71-94
- 박종철(2014),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변화방향”, 한반도 평화통일국민대토론회 『한반도 평화 통일의 과제, 어떻게 풀 것인가』, 여의도연구원 통일연구센터
- 브란덴부르크 사회과학센터(2013), 『독일통일이후 동서독주민의식변화분석』, 통일부
- 염유식, 김여진(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유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사회학』, 45(2), 91-129
- 유병선(2012), “북한이탈주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문제점,”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13(1), 88-100
- 이금순, 고성호, 안혜영, 장혜경(2009), 『비핵·개방·3000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통일연구원
- 이금순, 윤여상(2006), “북한 주민의 국경이동과 처벌 실태,” 『통일문제연구』, 18(1), 217-252
- 이덕남(2013),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재구성 경험과정 연구: 정책적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한국 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8(11), 201-212
- 이순형(2009), 『탈북민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순형, 김창대, 진미정(2009),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장명선(2011),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생활실태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연구,” 『평화학연구』, 11(4), 361-395
- 장혜경(2000),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 장혜경, 박복순, 황의정(2014). 『통일대비 효과적인 가족정책지원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현백(20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여성과 평화』 통일문제토론회,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 조영아(2012), “남한에서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4(1), 197-222

- 조영주(2012), “통일담론과 여성의 실천”, 『북한학연구』 제8권 제2호(2012.12), 동국대북한학연구소
- 조영주(2015), “분단시대 극복을 위한 여성의 역할”. 2015 민화협 여성위원회 워크숍 원고
- 통일부 홈페이지, 2014년 11월 20일 검색
- 통일부(2014a), 『사회생활』, 통일부
- 통일부(2014b), 『우리생활 길라잡이』, 통일부
- 하나원 내부자료, 2014년 10월 30일
- 한인영, 조영주외(2008),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연구』, 여성부
- 홍승아(2013), “가족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여성의 정착과제 :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5(2), 173-205
- 황영주(2001), “평화, 안보 그리고 여성”, 『여성과 평화』 통일문제토론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Shi-Eun Yu, Jin-Sup Eom and Woo-Taek Jeon, “The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dentity as South Korean in North Korean Refugees Living in South Korea,” Psychiatry Investig, 9:209-216

지정토론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김영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원장)
- 안김정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 이난숙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장)

- 이민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장)
-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토 론 문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 총평

-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 위해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평화의 역사적 전기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해
 - 한반도는 2차 대전 이후 7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어 하루빨리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형성해야 함. 이를 위해 협력적 남북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 돼야 함.
 - 올해와 같은 역사적 계기를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면, 동아시아는 남북분단을 전제로 한 신질서가 고착되고 무한의 군비경쟁과 함께 남북 간의 핵 참화를 불사하는 군사적 각축과 긴장은 확대될 것이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군사적 갈등해결과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길로 가야 하는 일은 더는 어떤 이유로도 미룰수 없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임. 갈등과 대결로는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 할 수 없음.
 - 아직도 그 슬픔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안보’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됨. 국방비로 37.5조 원을 사용하는 국가가 정작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와 구난을 위한 장비는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것의 원인에는 분단체제 하에서 모든 것을 압도해온 국가안보지상주의가 자리잡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메르스 사태 앞에서 다시 안보의 우선은 ‘시민 안보’라는 것을 인식 하게 됨. 남과 북 모두 국방비를 늘리는 대신 시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그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광복 70년, 분단 70년, 이산가족이 만나고, 경제협력을 하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남북 그리고 해외동포가 함께 오르고 보면서 평화가 돈이고 희망이며 확실히 미래의 보장임 알게 했던 6.15 남북 공동 선언 15주년을 맞는 올해는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적 계기를 만들기 위한 민간의 노력과 기대가 높았지만, 지난 8월 20일 오후 북한의 선제사격과 남한의 대응사격으로 휴전선 서부전선에서 포격전이 발생, 관계개선이 아닌 전쟁위기가 대신하게 됐음. 그러나 다행히 남북 당국자 간 회의를 통해 위기는 넘겼으며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냄.

- 어렵게 만들어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식으로든 결실을 맺으려면 이 시기를 놓치면 남북관계는 반전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 질 것 이므로 정부의 평화통일에 대한 진정성으로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됨.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졌고, 분단체제가 가장 큰 위협인만큼 전쟁의 위협속으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 매우 중요 함. 이러한 시기에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시의 적절하고 매우 의미가 큼.

- 여성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준비의 의미와 실천과제, 왜 여성이 통일준비과정에 참여해야 하는지, 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평화통일준비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지를 살펴보고, 여성의 참여확대, 여성 및 가족문제의 해결, 성인지적 및 여성주의적 관점의 반영을 여성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성인지적 통일기반 조성, 탈북여성 및 북한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제고, 국제평화여성 운동과의 연대 활성화 등의 여성평화통일 실천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 발표문에 전반적으로 공감.
- 특히 평화통일실천여성사회협약 추진운동은 여성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확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으며, 민주시민교육과 더불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주로 진행하고 있는 갈등조정교육을 통해 차이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공존하는 훈련 필요.
- 남북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노력만으로 어려움 존재, 당국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 신뢰회복과 확장은 교류 의제 보다 정부의 대결과 압박의 대북정책을 평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상호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들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5.24조치 해제 등)
- 이러한 전제 조건이 마련돼야 중단 된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사업의 재개 되고, 여성들의 역할을 높여 낼 수 있는 기회와 여성의 삶에서 제가되는 문제들을 남과 북의 여성들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에

대한 여성계의 요구가 필요하며 한편으로 그동안 남북여성들의 민간교류의 성과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범여성계가 연대하여 불안하지만 어렵게 조성된 남북 관계 개선 국면에서 지혜를 모아 낼 필요 있음.

- 통일은 과정이며 여성의 삶의 조건과 환경을 재구조화하고 재 창조하는 과정으로, 여성은 평화운동의 주체로서의 역할과 통일운동에서의 객체화 되어있다는 진단에 적극 공감.
- 많은 구체적 과제들이 실행되어 여성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확대 되고, 남북여성들의 사회문화교류 확대에도 기여, 통일운동과 평화, 젠더 ,생태를 결합한 여성평화통일국가 담론 생산에도 기여 하길 바랍.

2. 제언

- 분단체제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곧 여성통일평화 운동의 필요성
 - 분단체제는 군사주의 문화, 경제적 어려움, 억압과 폭력 등 평화를 위협하고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여성들 분단체제 극복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통일평화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함.
 - 보수정권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 긴장, 군사적 충돌을 통해 불안한 정전체제를 흔들리지 않는 평화 체제로 바뀌야 한다는 과제의 중요성이 제기,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젠더이슈 제기와 여성참여 보장 중요
 - 평화체제는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평화협정을 통한 법적, 제도적 평화보장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 통제, 북한의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해 실질적 평화정착이 달성된 상태*<김연철 인제대 교수/한반도 평화체제/단계적 추진 전략>
 - 여성통일평화운동역량 강화를 통한 운동의 지속성을 위해 물적기반 마련, 인적자원 개발과 육성 필요
 - 시민사회, 통일운동단체와 연대를 통한 여성단체 역할/여성독자적 활동 적고, 사회적 으로 가시화 되지 않고 있음
 - 여성들 통일인식 부족->여성참여 통일평화운동의 일상화, 생활화(성평등문화 인식 개선, 평화문화 가꾸기, 평화교육 등)
 -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해 성주류화 전략을 채택한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다룬 행동강령 12개 관심분야 정책분석을 여성통일 평화운동의 관점에서 점검과 평가를

통한 실천과제 찾기

- 한반도 통일 문제는 국내문제이며 국제문제->국제연대 활동(동북아여성평화회의, 한중일 연대, 탈핵연대 등)확대
-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에 적극 참여

○ 남북관계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실질적 준비를 위한 역할

- 화해와 협력 정책은 공존을 위한 최소 기반이며 북 경계대상이 아닌 지원과 협력의 대상이 되어야 함.
- 5.24조치 해제->경실련이 조사 (2013년)발표한 전문가 73%, 5.24조치로 북한제재효과 없어 압도적 다수(91%), 5.24조치 해제·완화로 전향적 남북관계 열어가야 한다는 의견,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론도 5.24조치 해제 없이 진행 할 수 없는 것/선 비핵화 후 교류협력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함
-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남북관계발전 중요, 여성들 평화체제를 이끌어 갈 동력으로 작용,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화해와 협력정책 후퇴, 민간사회문화교류 중단, 여성교류 중단되었으나 여성들은 2013년8월 심양/2014년 3월 심양에서 남,북,해외 공동토론회 개최(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이라는 남의 여성단체들의 비판이 있었던 주석단 문제 해결), 이를 이어 나갈 수 있는 노력이 구체화 되어야 함. (예)남북여성 평화통일 한마당, 공동관심의제 토론회 등)
- 남북여성연대 강화를 위해 간헐 적으로 운영되어 온 남북여성대표자회의 상설화(엠비 정부 이후 교류가 중단 됨,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남북여성교류 사업의 보장을 위해 필요)를 위한 노력
- 지속적인 사회문화교류와 여성이 만드는 통일 사회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고 공동협력 사업 진행,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 등 진행 필요.
- 남북여성연대는 남북 차이를 줄여 나가위한 노력으로 정부로 부터 독립적, 당국관계 보완, 선도적 역할 수행 하기도, 남북민간교류가 중단된 채 수년이 흘러 사회문화 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공동기구의 (6. 15여성본부)활동이 축소->역량 축적을 위한 노력 필요, 새로운 남북여성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범여성 기구 모색 필요

○ 정부와 여성단체들과의 민간거버넌스 구축 및 확대

- 평화, 통일, 외교분야에서 여성단체들과 정부의 협력구조 없음-1325국가행동계획 이행 과정에 참여보장 구조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확,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 보장,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 이행보고서에 1325이행 포함해야 함, 평화와

통일 여성에 대한 정보공개 및 성별통계 작성 보고, 통일, 안보 외교영역 여성리더
발굴 양성, 인도적 지원-남북협력기금->사용절차와 과정에 여성의 현실 반영, 관련
분야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여성통일평화 단체 지원, 남북여성교류 지원

토 론 문

김영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원장)

1. 총평

- 본 발제문은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것을 위해 왜 여성들이 나서야 하며, 여성들은 어떻게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점에 집중하고 있음.
- 단지 평화통일에 여성도 한 자리 끼어들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여성의 관점과 경험이 배제된 채로 이루어지는 통일은 남성중심적 질서의 남북간 결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임. 이 지적에 공감함.
 - 한국은 놀라운 사회경제적 영역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이며, 북한 사회는 매우 가부장적 질서 위에 세워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 통일이 우리의 미래라면, 평화통일은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임이 분명하고,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양성평등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자명해짐.
- 이러한 측면에서 제안하신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에 관해 의견을 말씀 드림.

우리나라 최대 접경지이며, 분단1번지 강원도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으로서, 또한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본 발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통일로 일보하려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적이고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함.
- 그 동안 강원도는 「분단1번지」에서 「통일1번지」를 향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
 - '98. 9월 전국 지자체 최초 남북교류 전담 조직 신설을 시작으로
 - 같은 해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 및 기금조례 제정 운영 등 ('99~'15 : 총135억. 집행 79억)
 - '00. 12월 도지사 직함 최초 북측초청 평양방문을 시작으로 남북 동질성 회복 및 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교류사업에서 강원도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 아래 '정경분리, 선경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전략을 펼치고 있음.

- 철원 남북 평화산업단지 조성(제2의 개성공단), 송어양식장 건설, 영농협력, 동해선 개통 후에 환동해지역 동일경제권 성장을 준비하는 등 경제교류를 준비하고 있고
- 남북한유소년축구대회 추진 등 스포츠 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을 제안하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대통령 제의)을 고성에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임.
- 여성정책분야에서는 '00년부터 '11년까지 여성리더 중심의 강원여성통일연수를 실시해 왔음.
- 또한, 최근 강원도의 여성계(강원여성100인회)에서는 'DMZ 세계평화공원' 강원도 유치를 위해서 유치결의대회, 5만서명 운동, 천송이 장미 봉헌 축제를 벌이는 등 평화통일운동에 참여해 왔음.
- 그러나 본 발제에서 강조되듯 양성이 평등하고 성인지적인 통일을 이끌어 낼 실천은 거의 전무했던 것도 사실 임.
- 이런 점에서 본 발제에서 여성평화통일 실천 5대 과제로 제안하고 있는 내용에 주목하고자 함.
- 특히, 평화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평화통일 실천 여성사회협약'을 만들어 내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절대적으로 공감.
- 이것을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 및 대토론회 제안도 필요한 안이라 생각함.
- 이 외에도 발제문에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여러 단위의 조직적 인프라에 관한 제안이 있음.
- 남북한 여성교류를 위한 남북여성생활문화추진협의체 구성 : 이는 정치중심의 남북 교류나 경제중심의 교류를 넘어서 더욱 일상생활과 밀착된 교류방안으로서 남북의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
- “통일부 등 통일관련 부서에 여성참여확대” 주장 역시 중요.
- 여성가족부에 여성가족통일담당관제도 신설하자는 주장과, 여가부 주도 하에 남북 여성가족위원회 구성하자는 제안 모두 실효성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함.
- 북한 이탈 여성들과 여성단체간의 교류 활성화, 국제여성평화운동과의 연대 활성화 역시 매우 중요한 전략임.

2. 전망

- 인도적 견지에서나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평화통일은 중요한 것이며, 특히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분단 1번지로 “막혀 있던” 지역인 강원도가 통일을 위한 통로이자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할 일이 많음.

- 지금까지 통일운동에 관한 여성계의 실천은 정치이념에 기반한 통일 운동을 다소 수동적으로 따르던 경향이 없지 않았음. 이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여성의 입장에서 통일 운동이 평화통일에 실질적으로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실해 졌다고 봄.
- 또한 평화통일이 단지 정치·경제분야 지도자들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 여성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 여성단체들의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활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여겨짐. 이에 평화통일을 위한 강원도 여성계의 분발이 있어야 함.
- 또한 평화통일 관련 여가부의 위상이 제고되고 협의체 등 정책전달 통로들이 생겨난다면 여성정책 연구분야에서도 남북한 상호이해를 돕는 생활밀착형 연구와 정책개발이 더욱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전망함.

토 론 문

안김정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1. 총평

1) 개념의 문제

발표자의 ‘여성평화통일’은 ‘여성이 주도하는(주체) 평화스러운(방법/과정) 통일(목표/목적)’로 판단되며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은 둘 다 모두 과정일 수도, 또한 목표/목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때때로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기도 합니다(3쪽 평화운동 서술 중 남북여성교류와 북한여성지원은 통일운동으로 기술). 따라서 평화운동의 주체로서의 여성과 통일운동의 객체로서의 여성이라는 구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평화는 밥이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밥’은 ‘생존’이자 ‘인권’의 문제이며, 이는 개개인의 인권, 사회의 평등, 국가의 통합, 나아가 세계의 평화로운 공존을 의미합니다. 이 때의 평화는 ‘소극적’ 평화가 아닌 ‘적극적’ 평화를 의미함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통일 역시 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깨는 통일은 평화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목표이자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이 땅 한반도를 터 삼은 우리 남북한 여성들이 생존과 인권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 여성들의 준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발표자가 제시한 여성평화통일준비 3대 기본원칙과 여성평화통일실천 5대 과제에 동의합니다.

2) 왜 여성이어야 하는가? 의 문제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전쟁, 분단 고착화의 과정에서 여성은 배제되고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여성은 늘 피해자로서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사는 존재, 이들의 경험과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폐기되는 역사였습니다(기지촌 여성, 월남민 여성, 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생존여성 등).

그동안 한반도 문제 해결이 안 된 이유가 통일전문가, 평화전문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문가 과잉 시대에 살고 있지요. 하지만 이들 전문가는 주로 남성들입니다. 이 땅의 가부장제와 군사주의는 여성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분단의 적입니다. 비단 한반도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소위 ‘현실주의(realism)’로 포장된 냉전적 사고방식이 국제관계 이론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G. Kennan, H. Morgenthau, H. Kissinger etc). 이들이 주장하는 ‘안보(security)’는 힘과 폭력을 전제로 한 군사 안보, 국방 안보이고 그 전제는 ‘1등 시민/보호자로서의 남성성’이며 제로섬 게임입니다. 여성은 항상 ‘2등 시민/피보호자’로 상정됩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UN에서는 ‘인간안보’ ‘공동안보’의 개념을 내 놓았고, 여성주의적 시각에서는 ‘여성안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안보’라는 개념이 계속 기존의 것으로 사용된다면 이를 해체, 폐기시키고 다른 개념, 예를 들면 ‘안전’으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성안보’의 내용은 1985년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에서 정의된 ‘평화’의 개념, 즉 ‘폭력이 없는 상태(absence of violence)’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군사적·경제적·성적인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발표자의 글에서도 밝혔듯이 대부분의 여성은 모성적 사고와 돌봄의 윤리에 기초하여 배려, 상생,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기존의 남성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 내는 경쟁과 효율, 승자독식과 차별, 배제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3)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떤 통일의 청사진을 그릴 것인가? 의 문제

2. 제언 : ‘남북여성평화생태 마을’ 만들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과정과 목표는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DMZ 세계평화생태공원’을 제시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남북한의 여성들이 DMZ 안에서 같이 어울려 농사 짓고 각자의 기호와 취미를 살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매개로 한 ‘정직한 밥’ 만들기이지요. 현재 남북한 공히 문제시되고 있는 빈부 격차와 이로 인한 사회 갈등, 불안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체제나 이데올로기를 떠나 돌봄과 배려에 익숙한 남북한 여성들의 평화롭게 살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을 거스리지 않는 유기농법 사용과 유통, 도시와의 연결 등으로 환경안전과 식량자급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자가 언급했듯이

결국 통일은 ‘제도’나 ‘체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정신’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생태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면서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견 나누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궁극적인 통일의 큰 밑그림이 그려지겠지요. 이는 위로부터의(top-down) 통일이 아닌 밑으로부터의(bottom-up) 통일이며,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풀뿌리(grassroot)’ 통일이 될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도 체득할 수 있을 것이고, 내 손으로 내 땀을 흘려 이룬 소중한 자급자족의 영농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력, 평등의 가치를 내재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영웅이 필요하지 않은 통일, ‘풀뿌리’ 여성이 주인되는 통일을 기대해 봅니다.****

토 론 문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1. 총평

‘평화통일과 여성’을 주제로 여러 각도에서 평화운동의 주체이며 통일운동의 주체로서의 여성을 분석하여 여성의 적극적 참여는 물론 적극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중요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방향제시를 하여 새로운 통일의 지형을 보여준 발제다. 여성의 평화지향의 특성이 어떻게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고 그 주된 역할을 하여 빛나는 풍요로우며 행복한 한반도 통일시대를 맞을 수 있을지의 방법론적 대안도 구체적으로 제안되어 있는바 이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일에서의 여성참여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에 필자는 여성이 중심이며 또한 주요대상이어야 할 미래 통일 준비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한 분야를 더하고자 한다. 보건의료분야, 특히 여성과 아동이 중심이 되는 모자보건 분야에의 관심과 투자와 교류·협력을 강조하는 바다.

2. 보건의료 및 모자보건분야 제언

어느덧 분단 70년. 패전국의 식민지였다는 사실 하나로, 독립을 이룩한 승자였으나 패전 피해국의 최대 피해국으로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어이없는 비극을 마주하게 되었고 세계역사 중에 마지막으로 동족이 분단된 나라가 되어 그간 가족들조차 만날 수 없는 불행한 나라로 살아왔다. 개인적으로는 분단 가족의 딸로 살아온 지난 60여년이 통일과 남북관계에의 관심의 기초와 자양분이 되었다.

분단이 시작되고 특히 한국전쟁 후에는 남·북한 양측 공히 약자 중의 약자였던 여성과 아동들은 사회각분야에서 대부분 최고 피해자로 삶을 살아왔다. 눈부신 대한민국의 발전이 불행한 분단 역사를 덮고 있지만 통일로 이루어야 될 많은 누적숙제가 해를 더하며 쌓여왔고 남북의 차이가 더 정밀하고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필요로 한다. 매우 큰 통일준비의 과제

분야이지만 오늘은 간략히 보건의료분야의 협력과 교류, 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분야인 모자보건 분야에서 근본적으로 준비하고 분석해야할 부분을 몇 가지만 지적해 본다.

1)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 적극적 추진 필요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은 체제의 저항이 가장 작으면서도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뒷받침하며 남북한 간의 동질화를 보다 더 용이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의 현재 중요하게 대두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의 장기대책으로도 남북보건 의료와 모자보건은 강조되어야 한다.

- 통일비용을 줄이는 예방적 효과

보건의료는 주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이에 대한 상호교류 및 협력은 인도주의를 확산시키고 동포애를 고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다. 현재의 열악한 북한 주민의 건강상태를 고려한다면 통일비용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 협력을 통한 남북한 주민의 건강수준 격차 해소는 결국 통일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필자가 대표발의한 ‘남북보건의료의 협력 및 교류 증진에 관한 법률’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되었으나 부처 간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며 회기 끝나면서 자동폐기되었다.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대표발의로 외교통일위원회에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안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의 해인 2015년에는 법률이 제정되기를 염원한다.

입법이 우선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북한주민의 건강증진은 통일세대의 인구자질 강화

더욱이 여성과 어린이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인적 자질을 향상시켜 통일 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역량 증대에 중요한 작업이다. 현재 북한주민들의 건강 증진이 인도적 대북지원책의 일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에 따를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한반도가 공유하게 될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해서도 현명한 대책이 될 수 있다. 또한 통일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기본요소임은 물론이다.

2) 남·북한의 인구 및 사회지표 세밀연구

북한인구와 사회지표에 대한 연구는 남북보건의료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기초적인 부분이다. 이는 어쩌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통일에의 준비다. 남한과 다른 이유에서 북한은 경제 위기가 계속되며 많은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출산율의 정체, 사망률의 증가, 평균수명의 감소는 심지어 역방향으로 경제분야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북한과의 남북의료협력 공동연구 및 교류의 필요성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북측의 사회지표 변화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적어도 그들 보다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마땅하다. 북한인구 변동과 지표 등에 대한 정밀한 연구는 닥칠 미래를 준비하는데 기초자료로 매우 필요한 과제다. 또한 앞서 제안한 바대로, 전문가들에 의한, 매년 국가의 인구사회 경제학적 분석 보고서에 한 부분은 꼭 북한의 인구사회지표의 변화를 포함시켜야 하나 아직 많이 부족하다.

전체인구를 비롯하여 기대수명, 출생과 사망, 질병 통계와 기본적인 모성사망률, 영아사망률, 5세 미만 영유아사망률을 비롯한 매년 취합되는 여러 인구동태가 남한과 북한이 같은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놀랍게도 그리고 안타깝기 이를데 없이 수십년간 답보상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바라건대 북한과 공동으로 북측의 보건의료실태를 조사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대책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 최선이겠으나, 가능치 않다면 관련 국제 유관기구들과의 공동연구부터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3) 탈북 이주민의 건강 연구 및 건강증진

아래 표에서 보듯이 그동안의 누적 탈북 입국자는 총 27,518명이고 그 중 여성이 83%를 차지한다. 오늘 그 자료는 시간과 지면 관계상 나누지 못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 공공보건 의료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많은 북한 이탈자들의 건강을 살펴 왔다. 지난 8월 21일 그 기초자료를 나눈바 있고 앞으로 10월 2일, 11월 2일에 각각 모자보건 분야 및 정신건강분야, 결핵을 비롯한 감염병 분야에 대한 통일준비 의료분야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북한 이탈자 현황〉

	남성	여성
~'98	831	116
~'01	565	478
'02	510	632
'03	474	811
'04	626	1272
'05	424	960
'06	515	1513
'07	573	1981
'08	608	2195
'09	662	2252
'10	591	1811
'11	795	1911
'12	404	1098
'13	369	1145
'14	304	1092
15.6월	106	508

북한이탈자들의 건강상황을 분석하고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는 일은 또한 통일 준비의 한 중요한 축이기도 하고 남북보건의료 교류와 협력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시사점이 크다. 북한 이탈자의 83%가 여성인 상황에서 그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증대는 물론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

토 론 문

이난숙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장)

1. 총평

통일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과정이다

단순한 제도와 정치경제의 구조를 형성하는 체제 통합뿐만 아니라 각 체제에서 살아온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남북한 사람들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와 화해를 촉진하여 내적 통합 달성만이 진정한 통일이 아닐까하는 근본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함에 절대적 동감이다

평화운동의 주체와 통일운동의 객체로서의 여성이 되기위해서는 여성평화통일 준비 3대 기본원칙과 여성평화통일 실천 5대 과제를 제시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구경꾼이 아닌 주체로서 여성이 주도하는 새로운 평화통일 운동을 추진하고 실천 가능한 생활의제 중심으로 통일 논의를 확대하는 것 뿐만아니라 현실적인 북한이탈여성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평화통일의 현실적인 접근 방법들이 대안으로 되어 있다

국내뿐만아니라 세계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여성참여와 이해를 확산시켜 나아감에 적극적인 논의를 바라면서 끝으로 양성의 균형된 조화로움을 기대한다

2. 건설분야 제언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지뢰매설폭파 사건과 대북 확성기방송 시작을 빌미삼아 북한의 포격으로 남북한의 침예한 대립이 있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통일이후 시장에는 관심이

많은 통일이전 준비는 무관심하고 현실보다는 희망이 중심이 된 시장기대성이 지배되는 상황임을 볼 때 통일전에 준비해야할 과제를 도출함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1) 건설 관련된 북한의 실정파악

- 북한 건설시장은 전면 교체시기에 도달
 - 도시기능 노후화로 전면 재보수 필요
- 중국건설자료 활용으로 건설시장 표준화가 중국화 되는 것이 우려됨
 - 우리나라 설계/시공 기술부문의 용어정리
- 북한 건설기술 인력의 미흡함
 - 북한 건설기술 인력에 대한 기술자 기능인력 양성정책
 - 여러가지 인성교육 병행
- 북한은 법보다 해석이 가장 우선됨(정치가 가장 우선)
 - 북한의 법과 제도 차이(자유시장경제 : 사회주의경제)

2) 통일에 대비한 건설업계 준비단계 발굴

- 실무협의회 구성
- 국토 인프라의 양적/질적 목표와 우선 순위 결정
 - 한국경제 성장경로로 갈 것인가
산업단지 및 전력(국민소득 향상) -> 도로 및 항만시설 (물류 수송 및 수출) -> 주택 및 도시개발(공공 및 민간 공급) -> 글로벌 네트워크(국제공항 및 고속철도)-> 지속가능한 건설(지구 온난화 영향)
 -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인가
동독 벤치마킹 - 과잉투자 우려
신모델 개발 - 시간제약
비상에 대한 계획 - 동독과 소련연방 붕괴 교훈
- 재정 조달 방법

3) 건설분야에 있어서 지금껏 그랬듯이 여성의 역할부분이 명쾌하게 있질 않고 남성위주로 진행되어 왔음을 인정한다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공공/민간부분등 여러부분에 기준이나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 평화통일 국민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토 론 문

이민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1. 총평

- ☐ 이번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를 통해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한민국 여성경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및 실천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
- ☐ 여성경제인계는 여성들이 통일에 어떤 자세로 얼마나 참여하는가에 따라 통일 이후 사회의 성별 불평등구조가 악화될 수도 혹은 개선될 수도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
 - “여성과 평화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발제문에서 여성경제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측면이 배제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 여성들의 통일의식을 높이고, 여성이 통일 객체에서 주체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일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2. 여성경제인계 제언

- ☐ 여성경제인 관점에서 통일은 국가경제활동의 기반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
 - 통일이 되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내수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자원부국으로 변화, 첨단기술과 고효율 노동력의 결합으로 새로운 도약 가능
 - '14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통일경제 인식조사 결과도 통일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매우 긍정 23.5%+다소 긍정 58.8%) 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82.3%
 - 통일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내수시장 확대(51.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북한인력 활용(47.2%)으로 조사됨

- 통일 이후 북한지역 진출계획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8.0%가 진출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 실현과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남북경협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며, 남북 공감대 형성 및 신뢰구축, 경제적 추진력 확보 등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

- 통일이후 성장을 위한 발전로드맵 및 추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통일비용을 감소시키고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 개성공단 국제화, 통일 이후 성장이 주목되는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급격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북한의 풍부한 인적자원·지하자원과 남한의 자본·기술력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전략적 접근 필요

□ 특히, 여성경제인 관점에서 바라본 평화통일 준비는 남북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 평등 도모,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지위 향상이 중요

- 통일 이후 남북 여성 상호간의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남북여성 경제교류 확대, 탈북여성들과 여성경제단체간의 교류 활성화 필요
 -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취업·창업지원 사업과 더불어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필요

* 북한이탈주민 관련 추이 : ('13년) 남: 369명, 여: 1,145명 → ('14년) 남: 305명, 여: 1,092명 (통일부, 2014)

□ 또한 남북한의 여성창업 활성화 및 경제특구를 활용한 남북한 여성수출산업 육성 필요

- 통일 이후 주목되는 산업과 여성특화산업을 접목한 여성기업 전략적 양성 필요

토 론 문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장)

1. 총평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서로 다른 체제를 동일한 제도와 정치경제적 구조를 형성하는 체제 통합과 각 체제 내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조건의 변화를 포괄한 사회통합을 의미한다. 그동안 체제통합과 관련한 통일과정과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논의와 통일한국의 사회 통합가능성 사례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정착 논의가 그 이유이다.

새로운 사회에서 사람들의 충돌이 크게 부딪히는 문제들을 고려하여 가치 및 제도에 대한 부적응과 사회적 배재를 극복하고자 하는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가치관 및 사회제도 전반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탈피한 성 평등사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통일 한국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 할 수 있다.

여성 및 가족관련 분야는 다른 영역들과 달리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일차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서 가치관과 생활의 차이를 야기하는 영역으로 통일사회 갈등의 근원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은 통일준비의 주요한 협력주체이며 여성가족관련 문제의 해결과 성 인지적(gender perspective) 통일기반 조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20여년간 남북한 교류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2015년 8월25일 남북기본 합의서 이행을 위한 노력에 이제는 여성들의 실질적 참여와 동행이 시작될 때이다. 본격적인 추진과정에서 여성평화통일실천을 위한 여성들의 역할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통일한국의 비전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성별노동분업을 벗어나는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통한 좋은 통일”이어야 하며 이는 여성과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여성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의 의미는 통일논의 및 과정에서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의 반영과 여성가족문제의 해결을 통해 남북한 여성들의 실질적인 삶의 조건의 변화로 통일한국이 보다 성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여성 및 가족관련 공동의제의 선정과 남북교류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은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와 역량강화, 성 인지적 통일기반 조성 및 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집약된다. 세부내용은 발표문의 내용으로 가늠하고 여기에서는 모든 통일논의 및 과정과 정책담론에서 여성이 함께하는 통일준비가 되어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방향의 모색,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드레스덴 구상(2014.3.28.), 통일부의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추진방안 등이 모색되고 이제 곧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노력들이 경주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여성들의 실질적인 정책참여와 통일정책 아젠더들의 성인지적 조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들의 소통과 연대와 리드는 풀뿌리 통일운동의 확산 (인도적 지원, 비핵화 등)과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구현시키고 국내 및 국제적으로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통일나눔기금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참고]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드레스덴 구상 2014.3.28.)

- 1) 인도적 문제의 해결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모자패키지 사업
- 2) 민생인프라 구축 : 북한 농촌단지 조성, 교통 통신 등 인프라 건설투자 및 지하자원 개발, 남북러 협력사업 추진
- 3) 남북동질성회복 :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역사연구 문화예술 스포츠교류 장려

□ 통일준비위원회 회의

1차회의 2014.8.7	2차회의 2014.10.13	3차회의 2014.12.2	4차회의 2014.12.2
우리가 그리는 통일미래 (통일미래의 청사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수립 -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전략 수립	남북간 민간교류와 협력증진 - 남북간 민간교류와 협력 증진 - 남과북,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익 공유가능한 협력산업 적극발굴	통일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연구 - 통일후 남북다른가치의 법질서제도 연구 - 통일후 헌법적가치 연구
남북이 만들어가는 통일시대 (평화통일의 과제)	통일의지를 고취,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수 있는 평화통일 현장제정 -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통일현장제정	기후변화대응 등 내실있는 사업추진 - 국제기구 협력 - 북한주민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지원사업 검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통일이 국가 및 개인의 삶 행복보장 확산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통일준비 방향)	북한주민의 삶의 질 제고 -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협력 긴요	북한인권문제개선 - 인류보편적 가치보호와 통일한국 미래	민관협력 수준향상 - 통준위가 연구성과 등 통일준비의 플랫폼
	통일한국이 글로벌 파트너쉽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범 국가가 될수 있도록 준비 - 남북관계는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국제규범과 관행 지킴 - 국제사회의 지지와 신뢰 속에 통일 이룩		통일의 중심역할 - 통준위의 역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추진방안

분과위원회	방향	세부내용
기획법제분과위원회	통일준비제도화 및 공감대확산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구축법(가칭) 제정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통일전담관 지정 및 운영 • 통일준비인력 양성 등 - 통일준비 건버너스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평통, 통일부, 통준위 등 유관기관 협업 및 역할분담 - 광복70주년기념 통일문화운동전개로 국민공감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지역, 참여·체험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정치안보국제분과위원회	2015년 통일준비와 남북간 현안 대응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관계 국면에 따른 상황별 대북정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착국면, 추가악화 국면, 개선국면 등 • 단기적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대북 국제공조 우선 - 남북관계 개선국면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동 • 통일준비를 기본외제로 하는 남북당국간 회담개최
경제과학환경 분과위원회	남북이 함께하는 북한경제 발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협 새로운 시각과 접근으로 북한변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국가간 경제협력에서 저개발국가와의 경제협력 • 기존의 SOC중심에서 개발경험 공유방식으로 확대 - 남북이 함께하는 북한경제 정책방향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대북진출 허용 및 장려 • 북한판 KSP 지속추진
통일교육분과위원회	국민통합정책을 통한 통일준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교육과 인성교육을 연계한 맞춤형 통일교육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관련과목을 대한 교양필수로 확대 • 초중고교 지역별 통일교육 전담교사운영 -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일상적 생활문화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를 매개로 한 세대간 공감 이해 기회제공 - 국제사회의 통일공감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외국인 대상 통일교육과 통일분비 홍보강화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	지속가능한 통일문화운동 전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통일문화운동을 위한 민관협력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문화협의회(가칭)구성, 문화예술인의 참여통로 마련 - 문화예술분야의 다양한 통일문화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 제작(통일관련행사시 확산) • 통일세대(청소년)예술인들 중심의 공연행사 정례화 - 남북체육교류의 정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체스포츠팀, 남북공통성이 높은 종목 중심
인도지원인권분과위원회	이산가족상봉 재개 및 정례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문제해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면적 포괄적 정책외제로 확대 • 고령이산가족 특별 상봉사업 추진 - 이산가족문제 국제적 공론화를 통한 실질적 방안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중재공식 요청 • 대북인도적 지원 및 민간채널 활용
사회복지분과위원회	통일준비와 탈북청소년 인재양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청소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적인 정착지원으로 통일메신저 및 핵심 소통자 - 탈북청소년 통일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형 거점 방과후학교운영, 남북청소년 동아리구축으로 남북사회 통합리더로 육성

분과위원회	방향	세부내용
종교민족화합분과위원회	통일과 남북화합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극복과 남북화합을 위한 종교인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종교의 협력관계 형성, 애국종교인 발굴 등 - 사회통합을 위한 구제와 나눔운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종교활동 지역 방문 • 종교NGO활동 활성화, 동북3성 탈북여성자녀지원 등 - 남북종교인 3통을 위한 종교교류 정례화
여성분과위원회	탈북여성의 남한사회정착을 위한 효율적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여성지원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가족-사회통합으로 종합적 중장기적 지원정책 - 탈북여성의 자립자활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스톱서비스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자녀양육 및 일가정양립 서비스 프로그램 활성화 등 • 사회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활성화 등
청년분과위원회	2015년 통일준비와 남북간 현안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레스덴구상의 민생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남북공동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만강-압록강 국경지역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등 - 미중러의 공동 관심사항 발굴을 통한 협력구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문제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공조강화 - 남북대회재개를 통한 현안협의, 호혜적 남북경협추진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5 1차통일정책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재구성

토 론 문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광복70주년, 분단70주년을 맞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과 통일 준비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준비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뜻 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발제자께서 평화 통일을 위해 성인지적 통일기반 조성과 여성들의 주체적인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이는 통일 준비의 로드맵에 중요하게 포함되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본다.

특히, 통일은 일부 소수에 의한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지고, 현재의 해결과제가 아닌 미래의 과제로 여겨져 일반 시민들이 더욱 무관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점점 적어져 가는 이때야말로 남북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전히 남북 여성들의 일상에서는 차별, 폭력, 편견, 편향된 성역할, 갈등 등으로 평화롭지 않으며 한반도 내 남한 공동체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남성 중심의 젠더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삶과 경험을 드러내고 이를 해석하고 역사화하는 과정 없이는 온전한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성들의 삶의 조건들을 재구조화하는 가운데 여성의 참여를 통한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시된 ‘여성평화통일실천 5대과제’는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그간의 다양한 여성,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평화운동을 결집시키고 통일의 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논의들이라고 생각한다.

한국YWCA는 93년이라는 역사 동안 평화통일의 긴 여정을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비전을 품고 걸어왔다. 1980년대 이후, YWCA는 기독교적 평화가치를 가지고 개개인의 삶의 과정과 직결된 평화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평화운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에서 내건 ‘평화는 인권이다’라는 정의, 평등, 자유의 가치와 원리로 움직이는 사회를 지향하는 비전을 가지고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연구, 기도운동과 평화교육, 일상에서의 나눔의 실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전을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지역과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 등을 전개해 왔다. 이는 다양한 기도모임과 교육, 심포지엄, 워크숍, 모금활동, 캠페인, 그리고 향후 통일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북한이탈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어나가고 있다. 더불어 북한에 대해 잘 이해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변 여성들의 지도력훈련과 문화운동을 지원하고 교류하면서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전개해 온 한국YWCA의 운동과 연관된 ‘여성평화통일실천 5대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남북여성교류활성화

한국YWCA는 1994년에 남북한 여성 지도자들과 중국, 독일, 미국, 일본 등 5개 지역의 한민족 여성대표들이 만나 평화통일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민족 여성지도자대회를 연변에서 개최하였고, 이후 후속모임으로 2년 후인 1996년 뉴욕 플러싱에서 ‘세계평화와 여성연대’라는 주제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한국대표들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사회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평화정착과 통일사회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한국 사회를 넘어 보다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으나 이 두 모임 모두 원래의 초청대상자였던 북한의 여성지도자들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이러한 점에서 발제에서 제시된 남북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여성교류가 정례적으로, 지속적으로, 분야별로 이루어지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각 분야별 공동의제를 발굴하는 과정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삶을 논의하는 남북여성교류는 상호간의 차이를 좁혀 나가며 공감의 깊이를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남북 여성들의 참여확대와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 영유아 인도적 지원

직접지원활동으로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회원과 지역사회의 참여운동으로 ‘북한 어린이에게 분유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통일시대에 만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야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운동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운동은 일반시민들과 YWCA회원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관심과 북한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통일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평화실천운동은 원활하지 못한 남북 관계를 통해 좌절과 기대를 반복해 오고 있다. 요즘같이 남북의 긴장상황 속에서는 전혀 인도적 지원활동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성들이 중심이 된 인도적 지원활동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을 원하는 여성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민간교류 확대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은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여성사 관련 공동연구, 조사 및 성인지적 통일기반 조성

아울러 한국YWCA는 7년 후에 맞이할 100주년을 바라보며 분단이전에 활동하던 선천, 안주, 원산, 평안, 함흥 등 5개 YWCA의 재건을 준비하고 있다. YWCA의 재건은 단지 이전에 존재했던 YWCA를 재건하는 의미를 넘어 초기의 실제적 여성운동을 발굴하고 그 역사적 기반 하에 북한여성들의 근현대사를 연결 짓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한국YWCA의 역사적 뿌리일 뿐 아니라 한국여성운동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발제에서 논의된 북한여성사 관련 작업들은 유물유적을 넘어서서 북한의 기독교운동, 여성시민운동의 초기 역사에도 초점을 맞추어 사료를 공동 발굴하는 작업 또한 병행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실제로 소외와 불평등을 경험한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자살률, 실업률이 늘어나 사회내의 갈등을 가져왔던 사례들을 교훈삼아 통일의 과정에서 성평등한 비전과 청사진, 남녀불평등의 문제나 직업과 삶의 가치관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좁혀 나가는 노력들이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일상화되어진 분단과 분단으로 인해 파생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통일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의 여성의 삶에서 어떻게 전문화하면서 불평등적 요소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자리 매김 할 것이다.

광복, 분단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특별히 여성들의 창조적인 발상과 힘으로 지난 5월 국제여성평화걷기(Women Cross DMZ)를 통해 나누었던 평화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 이는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남북 간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더 이상 한반도의 비극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갈등예방과 해결, 그리고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다짐하였다. 여성들이 주도한 Women Cross DMZ는 대화와 화해, 상호 이해와 존중,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였다. 또한 남북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믿고 시민사회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세계 여성들의 평화적 연대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과정으로서의 통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통일,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이루어내는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을 기대해본다. 특히, 남북 여성들이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평화통일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대중적인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욱 많은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며 평화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들도 함께 세워나가야 하겠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정의, 평화,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비전을 실제로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평화통일 운동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란다. 앞으로 통일준비위원회에서도 여성과 평화통일을 위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자리가 계속 마련되어지기를 바라며 아울러 남북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극적으로 남북협상을 통해 결정된 합의문 또한 평화적으로 성실히 이행되기를 바란다.

토 론 문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1. 총평

- 남북 관계가 위기에 봉착할 때 마다 국가 경제가 요동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통일은 더욱 절실히 질 수 밖에 없다.
- 최근에도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8월 22일부터 3일 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당국자 회담이 진행되었었다. 팽팽한 줄다리 협상 끝에 다행히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합의안들이 도출되었고 특히,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하게된 것은 매우 유의미한 성과이며,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우리 여성계가 통일 준비를 위한 논의의 장을 갖게 된 것이 매우 반갑다.
- 통일준비과정은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이후 사회통합의 과정을 포괄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통일은 두 개의 남북한 체제가 하나로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분단의 장기화로 남북 간 이질화가 심화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서로 다른 남북 주민들의 내면적 의식과 가치관, 생활방식이 하나로 통합될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점에서 통일준비가 ‘사람들’간의 갈등 치유와 내적통합을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여성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념논쟁의 진앙지로서의 평화통일운동이 아닌 생활의제를 중심으로 실천 가능한 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감한다.
- 특히, 통일 후 직면하게 될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균열을 고려해 국가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요구된다는 점과, 통일정책의 주체로서 여성 참여를 강조하며 여성가족관련 기구의 통일추진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안한 점들에 상당부분 의견이 일치한다.
- 통일의제 선정 시 여성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성평등적인 관점이 통일정책에 반영될 수 없으며, 남북여성들의 교류활성화에도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

통일 이후 가족의 삶과 여성의 지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무엇보다 여성의 관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제안1) 남북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법·제도의 정비

- 남북 간의 법률상 통일을 이루고 상이점들을 해결하여 생활의식이나 가치관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통일 양성평등보장기본법(가칭)’의 제정: 북한은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1946년 7월30일 제정했다. 북한 ‘여성권리보장법’ 제1조는 이 법의 사명에 관하여 ‘녀성권리 보장법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녀성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하고 있다. 내용은 남한의 양성평등기본법이나 그 밖의 여성관련법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북 간 ‘통일 양성평등보장기본법(가칭)’의 제정을 기대할 수 있다.
- ‘통일 가족법(가칭)’ 제정: 남북 가족제도는 호적 및 가족등록 제도나 부부의 혼인 및 이혼관계, 그리고 친족 범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남북주민 사이에는 혼인 관계가 중혼이 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2월10일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중혼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1953년 7월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그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남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중혼이 성립한다’고 규정, 남북의 이중혼인을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 상속재산의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혼 및 상속관계는 통일과정에서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꼼꼼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 통일된 신분등록제도 필요: 앞으로 남북주민 간 생사확인이나 서신왕래가 활발해지게 되면 신분등록제도가 서로 다른 점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다. 남한은 2008년 1월1일부터 호적제도가 없어져 묵은 호적부를 뒤져야 남북주민 간 혈족·인척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 북한은 1955년 호주제도 및 호적제도를 폐지하였고 이와 함께 가족이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며 우리와 다른 공민등록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의 생사확인 등은 더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는 신분등록에 관하여 남북 간에 통일된 신분등록제도가 필요하다.

제안2) 통일 여성인재육성 및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류 추진

- 통일 준비과정에서 여성참여는 필수다. 특히 통일 후 경제성장을 주도해나가려면 고급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이 절실하다. 따라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남북 과학기술교류 및 협력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협력센터의 설립, 남북 이공계 대학원생 교류와 과학도서, 과학교육용 기자재 공여 등 차세대 이공계 인력 양성사업, 기상재해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남북 기상협력 강화 등이 논의된 바 있다.
- 그러나 차세대 과학기술인력으로서 여성인력 양성에 관한 논의는 아직 없으며 평양과학기술대학조차 여학생은 1명도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IT 등 첨단과학기술로의 발전을 꾀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일부 우리 기업들은 디자인을 전공한 북한 기술인력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여성과학기술디자인대학(가칭)’을 설립해 북한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제안3)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가칭)남북가족신탁청’의 신설

- 남북 이산가족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14년 2월 현재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12만9410명이고, 상봉 신청자 중 실제로 상봉에 성공한 숫자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산가족의 대부분이 고령자이므로 이산가족문제는 시급성을 다투는 현안 중 현안이다. 2014년 2월 제19차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열렸다. 무려 3년4개월 만의 일이다. 그러나 상봉인원이 너무 적어 이산가족의 한은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 현행 방식대로라면 상봉 대기자 7만2000명이 20년을 기다려도 만나기 힘들다고 한다. 10년 후에는 같은 세대 간 상봉이 사실상 어렵다. 상봉 정례화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북한 가족에 대한 상속, 증여, 유증 제도다.
- 남북 가족의 상속문제를 살펴보면, 상속을 둘러싸고 남한에 있는 생존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고, 북한의 배우자나 자녀는 배제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6·25전쟁 이후 월남하여 성공한 이들이 남한 가족 몰래 가슴앓이 하며 북한에 남겨놓은 가족 명의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북한 상속인의 상속분을 관리해 주는 특별기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남북가족신탁청(가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분을 이 신탁청에 그들의 명의로 신탁하도록 하며, 신탁청은 통일이나 남북협력이 이루어져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까지 그 재산을 관리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 먼저 남한 가족인 공동상속인은 북한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남북가족신탁청에 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신탁청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만일 남한의 공동상속인들이 신탁을 하지 않는다면, 신탁재산이 북한 가족인 상속인 상속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친족이나 대리인이 북한 가족을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청구는 북한 상속인의 8촌 이내의 친족, 검사, 기타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관계인(절친한 친구, 먼 친척 등) 등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받은 상속분은 북한 상속인 명의로 신탁청에 신탁을 하도록 하면 된다.
- 이와 덧붙여 시급한 것은 이산가족을 비롯한 남북가족·친족 간 경조사 참여를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남북주민 모두의 바람인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친인척 경조사 참여 및 서신왕래를 현실화하고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전달할 수 있는 기관(예컨대 신탁청)을 설치하는 것은 생활의제를 중심으로 통일의 물꼬를 트는 실질적 대안일 수 있다.
- 우리나라는 현재 정전 협정 하에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북한의 인권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앞으로 우리 여성계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며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통일과 외교 분야에 여성들의 관심과 역량을 더욱 결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토 론 문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 총평

- 지금까지 여성의 통일운동 참여가 낮았으며 여성의 적극적 동참이 매우 필요하다는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함. 특히 통일운동에서 탈북여성의 참여 필요성에 공감함.
- 탈북여성의 통일운동 참여방안으로 제기한 탈북여성 및 북한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 제고, 남북여성가족위원회, 남북가족소통위원회 구성, 북한이탈여성과 여성단체 간의 교류 활성화, 탈북여성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남북여성문화 축제, 북한이탈여성과의 대화모임과 같은 탈북여성과 함께 하는 통일참여운동 방안을 적극 환영함.
- 이러한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 탈북여성계 제언

- 탈북여성의 통일운동 참여의 필요성

탈북여성은 통일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 탈북자는 새로운 이산가족이며 특히 가족의 해체로 여성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이 매우 큼. 남한에 온 탈북자의 70%이상이 여성이며 여성의 적응력이 우수함. 탈북여성의 통일운동은 통일을 추진해가는 과정일 뿐 아니라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될 것임.

탈북여성들의 통일운동 참여는 저조함. 그 이유는 초기 정착이 어렵기 때문에 참가할 경향이 되지 않는 것과 관련, 민주 의식, 시민 의식 수준이 높지 못함. 그리고 북한에서는 통일이 지도부에 의해 독점되고 있으므로 통일은 당과 국가가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탈북여성들은 누구보다 통일을 절실히 바라고 있으며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탈북여성들도 적지 않음. 탈북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동아리,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함.

현재 탈북여성들의 통일운동 참여는 남한여성단체의 탈북여성 관련 프로그램 실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 새조위, 조각보, 여인지사, 여성정치연구소 등에서 탈북여성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탈북여성교육, 상담, 문화 활동, 정치대화 등 다종다양함. 아직은 동참하는 탈북여성들이 많지 않지만 점차 참여가 늘고 있어 희망적임.

- 탈북여성의 통일운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① 남한사회 적응

탈북민의 남한사회의 성공적 적응은 북한주민들의 남한친화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탈북민 정착에서 가족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가족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 아이들은 물론 남성들의 정착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여기에서 지역의 역할이 중요함. 지역에서 여성들의 협력을 도울 수 있는 여성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함.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을 적극 소개하며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② 탈북여성의 통일의식 제고

탈북자들의 시민의식과 민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함. 북한주민은 오랫동안 독재체제에서 세뇌되었으므로 시민의식, 민주의식이 낮음.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교육은 통일 후 북한주민 교육을 위한 사전준비로도 될 것임. 그를 위해 탈북여성에 대한 시민교육부터 시작해볼 필요가 있음.

③ 남한여성들과 탈북여성들과의 화합

탈북자들의 남한정착과정은 통일예행연습이라고 할 수 있음.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이 실제 함께 하는 과정은 통일해가는 과정임.

남한여성단체와 탈북여성, 탈북여성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함. 남한여성단체들이 탈북여성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탈북여성단체와도 협력해보는 것이 좋을 것임.

3. 여성의 통일운동 참여에 대한 의견

- ① 현재 통일운동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남남갈등이라고 생각됨. 남남갈등의 수위가 너무 높으며 통일운동이 남남갈등의 표출구로 되고 있으며 통일운동에서 장애로 되고 있음. 여성들이 통일운동을 함께하는 과정에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함.

- ② 남한여성들에 대한 북한이해교육이 필요함. 남한 여성들 가운데는 북한을 알고 싶어 하고 통일운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음. 이들에게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통일운동에 인입하는 것이 필요함. 여성단체들에서 재미있는 다양한 통일교육프로그램을 개발집행하는 것이 필요함.
- ③ 남북여성교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이 북한실상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함. 정책 작성에서 북한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종합토론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김태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부의장)
- 김호선 (여성신문 대표이사)
- 서정숙 (한국여약사회 회장)
- 안정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원장)
- 원영신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
- 이영해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 임정희 (시민일보 대표)

-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정현주 ((사)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 채경희 (삼정학교(탈북자녀) 교장)
- 최영애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대표)
- 함영이 (여의도연구원 객원연구원)
-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 홍성순 (통일교육협의회 공동의장)
- 홍희경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황유정 (마중물여성연대 사무국장)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intended for writing.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intended for writing notes.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intended for writing.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 |

여성, 화해와 평화의 물길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Unification Preparation



국회여성가족위원회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